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3. 4. 14.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대통령 말씀 》

- ◇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되고 부처 칸막이, 불공정한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22.9.2.)

- ◇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서비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 제77차 유엔 기초연설('22.9.20., 뉴욕)

- ◇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처리, 네트워크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23.2.19., 스위스)



목차



I. 추진배경	1
II.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방향	2
III. 우리의 현주소	3
IV. 비전 및 목표	5
V. 중점 추진과제	6
1. 하나의 정부	6
2. 똑똑한 나의 정부	18
3.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35
4.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60
VI. 추진 동력	66

I. 추진배경

◇ 디지털 심화 시대,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국가전략 필요

-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
 - * 국가사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넘어, 디지털이 국가사회 구조를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
- 데이터가 핵심인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막힘없는 흐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전면적 혁신 필요

◇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DPG)'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이 변곡점에 도달*한 현시점은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 역량이 개인, 기업, 국가의 성패를 좌우
 - * [초거대 인공지능] 美 로스쿨/의사면허 시험 합격('23.1.), 미술대회 우승('22.9) 등 기하급수적 발전
[데이터] 전세계 데이터량은 ('21) 84조GB → ('26) 221조GB로, 연평균 21.2% 증가 예상(IDC, '22)
-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사회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정부 혼자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기업과 함께 해결책 모색

◇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

- **[국민주권]**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인
- **[포용]**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는 공공서비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 **[투명성]** 모든 데이터의 완전한 공개, 복지·예산 등 투명하게 공개
- **[성장]** 공공·민간의 데이터 융합으로 창업 활성화, SW산업 성장

인공지능 ·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모두가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실현

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방향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 ✓ ①정부 부처 간 칸막이, ②공공과 민간의 칸막이, ③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제도 간 장벽을 허물어,
- ✓ 국민에게는 하나의 정부로서 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기업에는 민관협업 바탕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공간을, 정부는 모든 부처가 함께 똑똑하게 일하는 정부로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

국민 중심	①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③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나의 정부	④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⑤ 행정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⑥ 공공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⑦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과학화한다.
민관 협력	⑧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⑨ 디지털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Ⅲ. 우리의 현주소

◇ 따로따로 부처 :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사이 데이터 칸막이

-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
- 하지만, 정부 기관 간, 민관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혁신과 가치 창출에 한계

※ 공개·개방된 자료도 hwp, pdf 위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환경에 미흡

- 특히, 개별적으로 구축된 공공부문 17,060개 시스템(1,118개 기관)은 공공서비스를 분절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 참고 : 정보시스템 및 칸막이에 막힌 데이터 구조도 >



☞ ((원인)) ▲정부 업무의 전문화·분업화 논리 하에, 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개방·공유를 막는 법령, ▲소극적 법령해석

◇ 기술은 디지털, 제도·절차는 아날로그

- 민간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은 정부·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민간 수준의 편리성 요구

* 금융·공공(증명서·납부 등) 등 업무를 한 곳에서 한 번의 인증으로 이용 등

-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제도·절차*에 따라 국민은 아직도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 존재

* [예시] ▲전체 민원사무(5,964종) 중 2,727종(45.7%, 인감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 불가('23.2월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1회는 무조건 직접 방문 및 서류작성 필요

☞ ((원인))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부 행정의 전산화·디지털화를 추진

◇ 그 간의 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방식이 한계에 직면

-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디지털 혁신기술이 산업·업종 간 경계를 허무는 등 복잡성이 증가

* 세계불확실성지수(IMF): 브렉시트('16) 30,182 < 미중무역갈등('19) 40,489 < 코로나19('20) 55,685

- 복합위기 시대,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이 요구되나, 정부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려는 전통적 방식에 익숙

- 최근 위기 상황에서,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체감*

* [사례] ▲민관이 함께 요소수 재고 데이터 확보/서비스 개발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마비 → 민간참여로 단기간에 해결

☞ 《원인》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일방향적 행정체계 등 '정부 주도의 행정' 관행, ▲실질적 민관협업을 위한 정부의 준비 부족

◇ 대규모 정보화 투자가 민간의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

- 그간 과감한 정보화 투자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구현

* UN 전자정부 평가 7회 연속 Top3('10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19년)

- 부처별 자체 시스템 구축(On-premise) 위주의 정보화 투자는 클라우드 등 글로벌 SW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 결과 초래

- 인공지능·데이터 역량이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경제 시대, 공공 IT 투자와 데이터 개방으로 산업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원인》 자체 구축형에 ▲익숙한 관행, 자체 구축형에 적합한 ▲예산·조달 체계가 변화에 걸림돌

IV. 비전 및 목표

비전

인공지능 ·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STRATEGY

01

.. 하나의 정부

- 1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 혁신(Digital by Design)
- 2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
- 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

STRATEGY

02

.. 똑똑한 나의 정부

- 1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통합서비스
- 2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
- 3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 4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 5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 6 디지털플랫폼 기반 지역 혁신

STRATEGY

03

..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 1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플랫폼 구축
- 2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
- 3 디지털 트윈을 통한 AI·데이터 산업 퀀텀 점프
- 4 GovTech 기업 성장 지원 강화
- 5 공공분야에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

STRATEGY

04

..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1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국민의 권리 강화
- 2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 체계 구축

V. 중점 추진과제

1. 하나의 정부

1.1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 혁신(Digital by Design)

현황 및 문제점

- 그간의 정보화는 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였으나, 제도·절차*를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화로 인한 정부 업무 생산성 혁신 및 국민 편의 증대**에 한계

* 방문 신청, 첨부서류 첨부, 우편고지, 종이문서 보관 등

** 방문 신청,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Time-Tax) 야기

-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절차들이 아날로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등 디지털 추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날로그 행정 지속

*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민원(5,964종, '23.2월)은 모두 방문 신청이 기본, 온라인 신청은 선택

** (예시 : 「전자정부법」 제7조)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 등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아날로그 기반의 현행 행정체계를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행정제도·절차에 디지털 기본원칙 적용

- 모든 행정제도를 '디지털 기본, 보완적 아날로그'로 전환 근거 마련(「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등)
 - 기존의 방문·종이문서·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온라인·데이터·자동화가 기본인 디지털 기반 행정체제로 전환
 - 민원 신설 등 개별법령 제·개정 시, 디지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절차 설계 의무화
- ※ 전담기관이 개별법령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전자문서 등이 모든 법령상의 서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

□ 행정제도 전면 재설계

-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업무를 전수조사·진단하고, 파급효과가 큰 업무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
 - 방문이 필요한 민원사무 2,727종*에 대해 원칙적 온라인화 추진
 - * 5,964종의 민원 중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한 방문민원은 2,727종('23.2월말)
 - ※ 방문·우편 신청만 가능한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분석하고,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환 가능 업무 도출('23)
 - ※ 서면 신청서, 확인서, 위임장, 첨부서류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전자서명 등 본인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
 - ※ 국민이 아날로그 방식(인감증명서)과 디지털 방식(전자서명 등)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부터 적용
- 오프라인 본인확인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법」),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법」) 등의 실물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하고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
- 정부 서비스를 온전히 디지털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설계·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igital by Design 지원사업' 확대
 - 대국민 편의성 및 체감효과가 큰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를 조사·발굴하고, 업무 전 과정의 디지털 기반 재설계(BPR) 및 전환을 지원

□ 종이 없는 행정 ※ 디지털 전환으로 임기 내 종이문서 사용량 50% 감축

- 종이문서 원본 보관에 대해 전자문서만으로도 갈음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규정 마련(「전자문서법」 개정)
 -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법령*(332개) 일괄 정비

-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등
- ※ 현재 개별법령 중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하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불가한 상황

○ 연구 현장* 등에서 감사에 대비하여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감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

*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관 규정 개정

** 「전자문서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계산증명규칙 등

현장의 목소리

- ▶ “종이문서 보관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비 등으로 인해 별도 사무실 공간에 보관 중인 종이문서의 양이 상당합니다” (H대학 산단직원 B)



H대학



S대학

○ 행정기관이 민원 등 처리 완료 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 고지’에서 ‘전자고지’를 기본으로 전환토록 법령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및 개별법령* 개정)

* 우편고지를 명시한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이 보내는 우편 알림·고지를 종이 없는 전자고지로 단계적 확대

※ 현재 송달확인이 필요하여 등기우편 송부가 필수인 업무도 ‘전자고지 열람 확인’을 기본으로 전환토록 추진

□ **AI가 읽는 문서**

- 사람을 위한 문서 관리에서 벗어나 문서의 생성, 보관, 공개를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 국민에게 공개하는 주요 문서*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23~)
- * 보도자료(첨부 보고서 포함), 채용공고문, 법령상 민원 서식 등
- ※ 문서저장 형식은 실증(‘23)을 거쳐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채택
-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 기록(종이, 시청각 등)을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초거대 AI 학습용으로 활용
- 모양·형식에 치중하는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문화 혁신
 - ※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표, 그림, 글자체 등은 인공지능이 읽기에는 부적합
 - 개방형 문서작성 가이드를 배포하여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작성·개방
 - 상급자부터 내용 중심의 보고서 요구의지 선언, 전 공무원 문서혁신 교육(문서서식 표준 등) 이수 의무화 등

□ **자동화 행정**

- 디지털로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는 자동화 기술(RPA*) 적극 도입
 - * (Robotic Process Automation) 규칙 기반의 단순·반복 업무를 SW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
 - 인사, 예산 등 내부행정 및 민원 신청부터 승인·통보까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조사·발굴하고 자동화 도입
- ※ 채용, 성과관리, 복무, 출장, 급여, 정보시스템 운영 등 내부행정 분야,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등 대민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행정제도·절차에 디지털 기본원칙 적용				
디지털 기본, 보완적 아날로그 전환 근거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안) 마련	-	-	-
② 행정제도 전면 재설계				
아날로그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	업무 조사·진단 및 전환업무 도출	단계적 재설계 및 전환	단계적 재설계 및 전환	단계적 재설계 및 전환
인감증명제도 디지털방식 대체 수단 제공	요구사무 조사	요구사무 감축	대체 수단 제공	-
실물 신분증 모바일 발급	기술 등 사전 조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발급	-
Digital by Design 지원사업 확대	수요 등 조사 및 재설계	지원사업 확대·운영	지원사업 운영	지원사업 운영
③ 종이 없는 행정				
원본보관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개별법령 정비방안 및 전자문서 기본원칙 연구	개별법령 개정 및 전자문서법 개정	개별법령 개정	개별법령 개정
연구현장 등 감사 시 증명자료 전자적 형태 제출	관계부처 업무협의	관련 규정 개정, 연구행정 도입	도입 확대	
전자고지를 기본으로 법령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안) 마련, 현황조사	개별법령 개정	개별법령 개정	개별법령 개정
전자고지 확대 ('23년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시범적용	35%	45%	60% 이상
④ AI가 읽는 문서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및 소관기록물 디지털화	(문서) 실증, 기관 적용 (기록물 디지털화) 34만건	(문서) 적용기관 확대 (기록물 디지털화) 100만건	(문서) 적용기관 확대 (기록물 디지털화) 170만건	(문서) 전 기관에 적용 (기록물 디지털화) 1,050만건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문화 혁신	가이드 배포, 보고서 교육 준비	교육 실시	교육 실시	교육 실시
⑤ 자동화 행정				
자동화 도입	내부행정, 대민업무 시범적용	단계적 도입	단계적 도입	단계적 도입

1.2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에서 네거티브 원칙으로 데이터 공유·개방을 추진해왔으나,

법률명	원칙	예외
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등
정보공개법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공개 대상	•다른 법령상 비밀·비공개사항(제1호) •개인정보(제6호), 영업경영상 비밀(제7호) 등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기관은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를 공유 가능, 타 기관 요청 데이터는 제공해야 함	•다른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상 목적 외 이용 제한금지 경우

- 데이터 주요 개별법령들은 여전히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두거나, “포지티브 개방 방식^{**}”을 취하는 등 과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공유·개방 방식이 작동되지 않았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원법」에서 공개 대상 데이터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한정

- 또한, 법률상 비밀/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데이터 제공에 따른 문제 발생 책임을 우려하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태도 빈번

☞ 데이터 활용·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낡은 법제도·관행을 데이터·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정비

□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데이터 공유·개방 방식으로 전면 전환

- 정부기관의 모든 데이터가 공유·개방되도록 예외 사항을 개인정보·영업 비밀·국가안보 등으로 한정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서 정의

- 모든 법령이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 되도록 의무화

-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정보공개법」 등 공공데이터 관련 일반법을 특별법에서 정의한 공유·개방 제한사항에 맞춰 정비

- 데이터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특별법」 제정 전에도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개별법령 전면 정비('23년~)

- 포괄적으로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유지를 적용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정비

< 주요 개별법률상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 조항 (예시) >

정보명	개별법령상 해당조문	정보명	개별법령상 해당조문
과세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민원 정보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 보호)
교통 정보	▲「택시발전법」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대중교통법」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통계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상권 정보	▲「소상공인법」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재정 정보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교육 정보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자료제공의 제한)	건강관리 정보	▲「약사법」 제6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의료기기법」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국토 정보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지적정보자료의 이용 등) ▲「도로명주소법」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식품 정보	▲「축산물이력법」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 공개 대상 데이터 범위를 한정*하거나, 공개 대상자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개별법령도 개선

* 「대중교통법」에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집계자료 형태(통계처리)로 제공하도록 제한

** 「택시발전법」에서 택시 운행정보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자(택시운송사업자 등)에만 제공

□ 네거티브 공유·개방의 지속 추진체계 마련(「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등)

- 새로운 데이터 칸막이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데이터 공유·활용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예시] ▲네거티브 방식의 데이터 개방·공유 원칙 부합 여부, ▲수집된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 등의 제한요인 존재 및 제한범위 적정 여부 등 평가

- 모든 정부기관이 기준에 맞게 법률·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고, 전담기관에서 이를 점검·시정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유사사례]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개방·공유 유도

※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마련

현장의 목소리

- ▶ 복지서비스 대상을 찾아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관계정보 파악이 필수적인데, 사법부의 승인이나 엄격한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제약이 큼. (보건복지부 S씨)
- ▶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싶은데, 민원처리 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서울시 L씨)
- ▶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진학지도나 학교 교수학습 개발에 이용하고 싶으나,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 K씨)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데이터 공유·개방 방식으로 전면 전환				
정부기관 간 모든 데이터 공유·개방 의무화	DPG특별법(안) 마련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개법 등 개정(안) 마련	-	-
데이터 공유·개방 저해법령 일괄 정비	정비대상 법률 조사	법률개정 대상 분석 (비공개 범위·대상 축소)	법률개정 (비공개 범위·대상 축소)	-
② 네거티브 공유·개방의 지속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활용 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데이터법 개정	-	-	-
전담기관에 법률·시스템 점검 시정권고 권한부여	DPG특별법(안) 마련	-	-	-
공무원의 적극적 데이터 개방·공유 유도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	-	-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기관 간, 정부와 민간부문 간 연계·협업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과 인프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 민간의 창의적 역량 활용에 한계
 - ※ 에스토니아(X-ROAD), 캐나다(CDXP), 싱가포르(CODEX) 등 해외 주요국은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이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공유·활용되는 단계를 지향
- 현행 공공의 정보화 추진방식은 시스템 단위(Monolithic*)로 개발되어 기능의 재활용이 어렵고 최신기술 도입과 신속한 서비스 개발에 제약
 -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기능 등 규모에 증가에 비례하여 복잡도 증가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활용 인프라 제공 및 클라우드 전면 전환 필요**

□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 마련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가칭 'DPG 허브') 구축('23~)
-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 마련
 - * 비정형데이터(영상, 음향, 이미지 등), 재난·교통·산업·국토 등 국가공유데이터, 가명화된 민원데이터, 민간데이터 등을 축적하여 초거대 AI 학습 등에 활용
- 대국민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맞춤형, 대화형으로 강화하기 위해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마련
 - *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AI를 민관이 다양하게 이용하여 창의적인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API 및 개발도구 등 종합 지원
- 정부 서비스 내 공통기능*을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부처 공용서비스 빌딩블록**' 구축
 - * [예시] 인증, 계정 및 활동내역 관리, 통지 등 다양한 기능을 빌딩블록으로 모듈화

- 누구나 혁신서비스를 등록하고 쉽게 구매·사용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 마련

※ 정부, 민간 누구나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혁신서비스를 등록하고 쉽게 구매·사용 가능

-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으로서 공공*·민간**의 주요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융합·활용 여건 조성

*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등

** 초거대 AI 플랫폼 등

-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마음건강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기능

<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개념도 >



□ 누구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소벤처, 개발자가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혁신 테스트베드 ‘(가칭)플레이그라운드’ 조성
-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서비스를 지자체 등 현장에서 검증·구현 하도록 실증(Field-Trial) 환경 지원

- 민간 클라우드 및 서비스 활용, 데이터 융합 등의 관점에서 DPG 원칙을 실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가칭)'중소기업 지원정보 맞춤형 알림 신청 서비스', '청년정책 맞춤형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서비스 개발환경 조성 시 기대 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벤처, 개인 개발자 등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기업은 첨단 혁신 기술 도입, 개발환경 구축 등에 어려움	•중소기업, 스타트업·벤처, 개발자들이 제공된 개발환경에서 첨단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창의적인 혁신서비스 개발 가능

□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

-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SaaS 적용 의무화('24~)

- 고도화 계획이 없는 기존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듈화된 서비스 구조(MSA**)를 반영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23~)

* ▲서비스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 ▲명확한 경계가 가능한 시스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한계지점에 도달한 시스템 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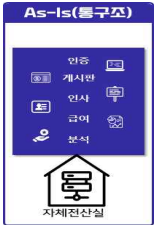
** (Micro Service Architecture) 기능별 모듈을 조합하여 빠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란?

- ▶ 클라우드 특화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

* 개발·운영의 통합 운영(DevOps), 자동통합·배포(CI/CD), 작고 가벼운 서비스 구조(MSA)

< 기존 방식 대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 >

기존 방식(Monolithic)	클라우드 네이티브
•크고 복잡한 통구조 •확장, 구축 및 개선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시 도입 어려움 	•작고 빠른 서비스 개발·배포 •탄력적·효율적 자원 활용 •최신기술 도입 용이 등 민간 혁신기술 활용성 및 서비스 유연성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정부 시스템 유치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준수 기준, 공무원이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공용서비스 활용방안 등 마련 및 컨설팅 지원('24~)
- 표준계약서·SLA 배포, 이용량 기반 요금체계, 장기 계속 이용 방안 등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23~)
- 클라우드 SW인프라를 개방형으로 표준화하고, 다양한 민간 상용 개발도구도 제공해 **클라우드 사업자 간 종속성 최소화 및 호환성 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며, 글로벌 민간 클라우드 수준의 HW 인프라 및 SW 인프라 제공

국민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데이터 칸막이 해소로 정부는 데이터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은 **완성도 높은 정책과 서비스를 경험**합니다.
- ▶ 확대 개방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의 성능은 올라가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 마련				
통합플랫폼(DPG 허브) 구축	DPG 허브 ISP	DPG 허브 구현	DPG 허브 운영·개선	DPG 허브 운영·개선
데이터융합 인프라 마련	데이터레이크 구현·운영 (3개 시스템)	데이터레이크 운영·확대 (10개 시스템)	데이터레이크 운영·확대 (15개 시스템)	데이터레이크 운영·확대 (20개 시스템)
초거대 AI 인프라 마련	초거대 AI API 기반 개발환경 지원	초거대 AI 플랫폼 간 공통기능별 API 표준 마련	통합개발환경 지원	-
범부처 공용서비스 빌딩블록 구축	범부처 공용서비스 설계	범부처 공용서비스 구축	범부처 공용서비스 운영·개선	범부처 공용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마켓플레이스 마련 (등록서비스 건수)	마켓플레이스 설계	마켓플레이스 구현/시범운영(100건)	150건	200건
② 누구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가칭)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지원건수)	80건	160건	160건	120건
혁신서비스 검증 및 구현 지원	-	리빙랩 구현·검증 (8건)	리빙랩 구현·검증 (신규 8건, 계속 4건)	리빙랩 구현·검증 (신규 12건, 계속 6건)
③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대상시스템*의 10% 달성	대상시스템*의 30% 달성	대상시스템*의 70% 달성
표준화·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가이드라인 운영·개선	표준·가이드라인 고도화

※ 대상시스템은 부처별 전환 로드맵 수립 이후('23.5월 잠정) 확정

2. 똑똑한 나의 정부

2.1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통합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부처·업무별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국민은 일일이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 감수

* '22.11월 기준 정부24 온라인 신청민원 2,537종 중 1,503종은 타 사이트 단순링크로 연결 (기초연금지급신청(복지부),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고용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신청(대법원) 등)

- 또한,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동일한 서류를 여러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사례]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 국민연금) 신청 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심사(복지부)와 동일한 서류(진단서, 의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를 국가기관에 제출

☞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현행 민원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여,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완료되는 대국민 서비스 구현

□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 Government, One Site

-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구축(~'26)

- 홈택스(국세청), (가칭)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 시스템·서비스부터 연계·통합('24년)
- '26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서비스 및 단순 링크로 연결된 각종 서비스를 연계·통합*

* 국민의 이용이 많은 주요 서비스(예: 기관별 Top10 서비스) 중심으로 완결 서비스를 구현하고, 나머지 서비스(단순링크 등 포함)는 통합 인증체계 방식으로 해당 웹사이트로 연계

< 연도별 단순링크 감축 목표(안) >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단순 링크 개수 (감축 목표)	1,503종 (BPR/ISP 실시)	1,100여 종 (400여 종 감축)	600여 종 (500여 종 감축)	0종 (600여 종 감축)
단순 링크 감축 대상(수)	-	국세청(홈택스 등) 113종, 고용부(고용24 등) 204종, 복지부(복지로 등) 56종, 교육부(나이스 등) 13종, 대법원(가족관계등록 등)	국토부(렌트홈 등), 관세청(유니패스 등), 금융위(e-금융민원센터 등),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등) 등 주요 행정부 서비스 500여 종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기타 잔여 서비스 600여 종

※ 연차별 이행계획은 '23년 BPR/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503종은 '22.11월말 기준)

- 국민이 선택한 하나의 아이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체계 구축 및 적용**

* 중앙행정기관 2,283개, 지방자치단체 6,285개, 공공기관 13,696개, 헌법기관 77개

※ ('23) Any ID 간편 로그인 시스템 구축 → ('24) Any ID 및 통합인증 적용(법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등 주요 민원사이트) → ('25~) 모든 공공사이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00여 개 이상)로 적용 확대

- 국민이 법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UI/UX 구현**

- 주요 민원서비스 창구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법정부적 융합 서비스 제공

※ ('23년) 공공 UI/UX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24년~) 법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적용 및 주요 민원서비스 창구로 확대

□ 정보요구는 한 번만 Once Only

-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이미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개인정보, 첨부서류 등)에 대한 중복 요구 제로화

- 정부·공공기관 간 행정정보연계 및 공공 마이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첨부서류는 국민에게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25)

·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6,000개 사무와 보조금사업, 일반 업무 등에 대해 현장실사·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제도적 제약사항 개선

※ 첨부서류 감축 대상사무 확대 : ('24) 50% → ('25) 75% → ('26) 100%

- '26년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의 확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정보제공) 지속 발굴·연계

※ 공유정보 확대 : ('23) 10% → ('24) 20% → ('25) 50% → ('26) 100%

(교부·면허 등의 민원사무 1,600여 종에 대한 현황 조사 후 목표량 설정)

- 국민이 금융·통신·의료 등 민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서비스*'를 민간서비스 분야까지 확대('22년 59종 → '26년 160종)

* 국민이 공공 혹은 민간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다수의 증명·첨부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 발췌하여 데이터꾸러미로 제공

<참고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서비스 개념>



- 본인정보 제공 요구의 권리주체를 법인·단체까지 확대하고, 기업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 조사를 통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 대상정보(예)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관세청) 관세납세증명서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행안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사례] 정부 및 민간의 정보요구 개선

■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시,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요구

⇒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출산 순위 등), 출생일 정보 등의 묶음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서류 제출 없이 신청·심사 진행

■ [민간] 협회·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 시

: 사회복지사협회에 온라인 자격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

⇒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전 과정을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

※ (정부) 묶음정보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구축, (협회) 마이데이터 수집시스템 마련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 Government, One Site				
단순링크로 연결된 서비스 연계·통합	BPR/ISP 실시	400여 종 서비스 연계·통합	500여 종 서비스 연계·통합	600여 종 서비스 연계·통합 및 완료
모든 공공웹사이트 통합 인증체계 적용	Any ID 간편로그인 시스템 구축	Any ID 및 통합인증 적용 (법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등 주요 민원사이트)	Any ID 적용 확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Any ID 적용 확대 (공공기관 등)
UI/UX 개선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고용24 시범적용)	법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및 주요 민원서비스 창구 적용	주요 민원서비스 창구 및 공공분야 적용 확대	-
② 정보요구는 한 번만 Once Only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 확대	정보 중복 수집·요구 현황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	20% 기관협의를 통한 공동이용 정보 확대	50%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동이용정보 확대	100%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동이용정보 확대 (계속)
공공마이데이터 묶음정보서비스 확대 (누적)	100종 법·제도 개선 추진	120종 기업 행정정보 연계 및 인증체계 구축	140종 기업 공공마이데이터 확대	160종 기업 공공마이데이터 확대(계속)

2.2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제공하는 1만여 종의 수혜성 공공서비스가 당사자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어 몰라서 못 받는 등의 사각지대* 지속 발생

*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정보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놓치는 경우 발생

- 정부에서도 보조금24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혁신서비스에 익숙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개인의 자격정보, 수혜정보 등 개인의 상황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체계 등

* 판정에 필요한 필수항목이 법적 제약 등으로 부족하게 수집된 경우, 추천된 서비스가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여 매칭률이 기대보다 낮음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능화하여, 정부가 개인 비서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선제적·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격요건과 상태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구현(~’26)

※ 각 기관(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 보다 정교하고 지능화된 분석을 통해 중복 추천 또는 누락 문제 개선

- 대상·자격요건 등 수혜 요건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 개인 데이터를 매칭·분석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

- 개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포, 고용24 등과 ‘혜택 알리미’ 서비스(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연계하여 완결형 서비스 제공

- 실시간으로 단계별 진행 상태를 알리는 모바일 푸쉬 서비스 제공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플랫폼(웹·앱)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

‘혜택 알리미’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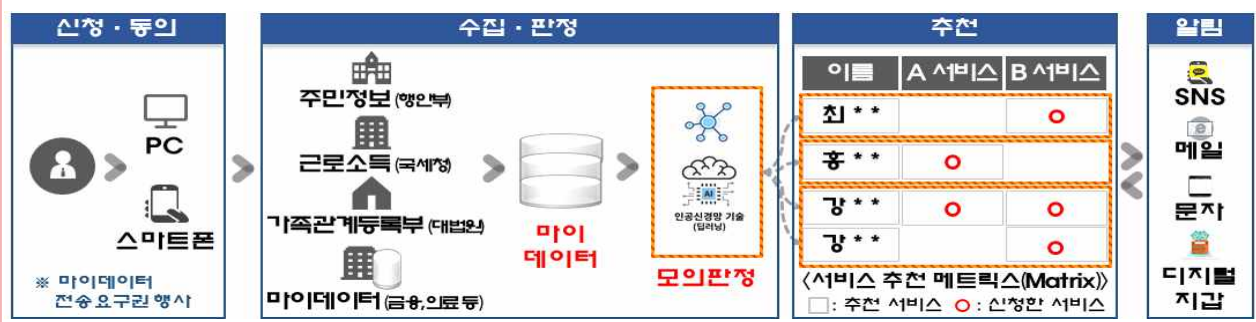
▶ (신청·동의) 국민 누구나 정부의 수혜서비스 알지 못해도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

* 원천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동의)

▶ (수집·판정) 신청인과 가구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마이데이터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에서 수혜 가능한 서비스 모의 판정(* 최초, 서비스 (선정)기준 변경, 개인의 상황 변화 등)

▶ (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받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일괄 추천

▶ (알림) 추천 정보를 민간플랫폼과 디지털지갑에 알리고, 각종 현황을 증명



-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공공서비스(구직, 청년 등)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6년까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1,021종으로 확대

< 참고 : 연도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 확대 계획(누적, 안) >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목표 (주요내용)	BPR/ISP	20%	50%	100%
추천 서비스	△고용부(해외취업지원 등), △교육부(학자금 상환 등), △복지부(기초연금 등), △국토부(영구임대주택 공급 등), △법무부(중소기업 법률지원 신청 등),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등), △식약처(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등의 수혜성 공공서비스 1,021종 대상			

※ 이행계획은 '23년 BPR/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실현되면...

- ▶ 이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인공지능이 수집·축적된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의 자격요건, 이벤트·상태* 등을 알아서 파악하고, 내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제공합니다.
* 임신·출산, 구인·구직, 이사·전입 등
 - ▶ 국민 누구나 정부의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 ※ (참고 : 현행서비스 예시) 실직한 국민이 구직급여(고용부)와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서비스가 필요하면 직접 검색하고, 보장기관을 찾아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음

○ 국민이 편리하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나만의 통합서비스 창구인 '디지털지갑'** 제공('23년 BPR/ISP)

- 행정서비스 안내·고지·납부 등을 통합 제공하고 디지털신분증, 전자문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
- 민간플랫폼에서도 정부의 디지털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혜택 알리미 구현				
맞춤형 추천 서비스 확대(누적)	BPR/ISP	20%	50%	100%
② 디지털지갑(가칭 국민지갑) 도입				
디지털지갑 서비스 제공(제공 서비스 수)	BPR/ISP	20종	100종	200종

※ 이행계획은 '23년 BPR/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3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무인·비대면 시스템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이들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

*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 ('19) 69.9% → ('20) 72.7% → ('21) 75.4%
키오스크(지능형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수준: ('19) 59.8점 → ('20) 64.5점 → ('21) 66.7점

👉 공공서비스 운영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 국민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 접근성·편리성 향상

-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고령자와 장애인의 웹·앱·기기 접근 및 편의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통서비스(SaaS, PaaS) 기반 마련
- 공공기관, 부처 등 범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모드 설계 가이드 및 템플릿 개발*

* 일반모드, 큰 글자·UI 모드, 고대비 모드 등 효과성·필요성 검증 후 확산 추진

- 지능형 웹·앱·기기의 접근성 표준* 보급·확산('23년~)

* 화면 이동 속도 조절, 음성·수어 안내, 높낮이 조절 키보드 등

- 장애인에게 첨단 디지털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지원

* (시각)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지체/뇌병변)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청각) 음성증폭기, 언어훈련 SW, 광학문자판독기 등 개발·보급('23년 5,300대)

- 재외국민과 동포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권과 해외 체류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 해외에서는 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이 없으면 온라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어려움

□ 대면서비스 강화

- 디지털로 아낀 시간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국민 모두에게 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

- 고령층 등이 행정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편리한 민원·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실’ 구축·확대
- 기본정보 자동입력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무인정보단말기, 태블릿 등 디지털기기를 제공하고 디지털 도우미*를 배치하여 서비스 지원

* 청년인턴, 퇴직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실무경험 제공 및 재취업 기회 확대

□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매년 1,000개소)
- 취약계층, 관련기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 [예시] ▲사회 복지사를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 ▲취약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장애인·고령자 대상 정보접근성 전문가 양성, ▲고령층 눈높이(老-老) 교육,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교육 등

□ 디지털 기술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어려움을 해소하는 디지털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분야	주요과제(안)
건강	▲우울증, 자폐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자기 친화형 인공지능 기반 시니어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
돌봄	▲수요자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중증 재가장애인을 위한 ICT 기반 원격돌봄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등
사회 복지	▲바우처 수급자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참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배달앱 연계('22년 경기·대구 구축)
이동 편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동활동을 증진하는 시각인지 지능기술 개발, ▲생활자립을 위한 자율동작 증강기술 개발 등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국민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 접근성·편리성 향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통서비스 기반 마련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범부처 공통서비스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범부처 공통서비스 운영·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범부처 공통서비스 이용활성화
지능형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표준 보급·확산	UI/UX 표준 보급	UI/UX 표준 보급 및 확산	UI/UX 표준 보급 및 확산	UI/UX 표준 보급 및 확산
디지털기기 개발·보급 확대	5,300대	6,000대	6,500대	7,000대
해외체류 국민과 동포를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마련	여권기반 비대면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해외체류 국민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재외동포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운영 안정화 및 이용률 제고
② 대면서비스 강화				
디지털민원실 구축·확대	2개 지자체 시범 도입 (성동구·거제시)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여부 검토	구축사업 확대	전체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
③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배움터 운영 (연간 운영센터 수)	1,0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디지털조력자 양성, 취약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등 (3개 시도)	디지털조력자 양성, 취약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등 (3개 시도)	디지털조력자 양성, 취약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등 (3개 시도)	디지털조력자 양성, 취약 청소년 미래 설계 지원 등 (3개 시도)
④ 디지털 기술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디지털 기술 기반 문제해결 프로젝트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생활자립을 위한 자율동작 증강기술 개발	생활자립을 위한 자율동작 증강기술 실증

2.4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어렵게 하는 칸막이가 존재하여, 효과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에 한계
-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미흡으로 단기적·단발성 분석에 그치는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제한적임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막힘없이 흐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주요 현안 및 정책·의사결정에 과학적 데이터분석을 확산

□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으로 고용, 산업, 지역, 재난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계 마련
 - 국가적 현안 판단 및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분석·시각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국정상황실' 구축('24~)
 - 분야별로 위기 예방·대응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여 '온라인 국정상황실'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
- ※ 분야별 담당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데이터 정의·획득·품질관리 등 연구개발 추진

□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 중앙, 지자체 등 기관별로 보유한 주요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23~)
- * 보건복지, 재정금융, 환경·기상, 교통·물류 등 17개 업무영역에 따라 1.5만개 데이터를 분류·저장하고, 업무영역·데이터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 민간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DPG 허브와 연계·통합

-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개선
-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민간데이터를 간편하게 구매·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23~)

※ [예시] ▲데이터 수요예보 실시, ▲데이터 전용 조달체계 활성화

□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

- 정책 수립* 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등

-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이 있는 분야부터 시범 추진('24~)

* (분석모델) 민원분석, CCTV 취약지역 분석, 초등 돌봄분석 등 11종

- 정책 수립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법제화('23~,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 확대('23~)

-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온라인 자동 분석 도구' 지원으로 담당자들의 편의성 도모

※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 표준화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 가능

< CCTV 취약지역 분석 표준모델 사례 >

모델명	주요 내용
표준모델 구성	· (공용데이터) 유흥·숙박 등 상가정보, 여성 등 인구자료, 단독주택정보 등 · (분석프로그램) 최적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시각화 도구 등
사용방법	·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CCTV 현황, 설치요청 민원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 (지역데이터)하면 표준모델이 분석하여 CCTV 최적지를 시각화하여 제공

○ ‘국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추진(’23~)

- 정책 파급력, 과제 필요성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수행

※ 공정 사회(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국민 안전(해외 사건·사고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응대 역량 강화) 등

○ **全 공무원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23~)**

- 기관별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 온라인 콘텐츠 15종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27년 목표 약 40만명)
(컨설팅)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한 기관별 역량강화 컨설팅(’27년 목표 약 75개 기관)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온라인 국정상황실 구축 및 국정 현안 대응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BPR/ISP	구축	시범운영	운영·고도화
②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유DB 구축	공유DB 구축	기관 연계	기관 연계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확대	(표준) 5,000개(누적) (품질) 운영 DB의 50%	(표준) 9,000개(누적) (품질) 운영 DB의 55%	(표준) 13,000개(누적) (품질) 운영 DB의 60%	(표준) 17,000개(누적) (품질) 운영 DB의 65%
민간데이터 구매·활용체계 마련	데이터 전용 조달체계 활성화	데이터 수요예보, 데이터 전용 조달체계 활성화	데이터 수요예보	-
③ 全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도입 준비	시범추진	단계별 도입	단계별 도입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 확대(건수)	14건(누적)	17건(누적)	20건(누적)	23건(누적)
국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건수)	12건 (분석과제 8건, AI과제 4건)	12건 (분석과제 8건, AI과제 4건)	12건 (분석과제 8건, AI과제 4건)	분석과제 지속 발굴 및 분석수행
공무원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목표)	(교육) 5만명 (컨설팅) 10개 기관	(교육) 5만명 (컨설팅) 15개 기관	(교육) 10만명 (컨설팅) 20개 기관	(교육) 20만명(누적 40) (컨설팅) 30개(누적 75)

2.5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참여(국민제안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참여 수단은 마련되었으나, 정책화 및 환류는 미흡
- 정보공개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막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데 많은 시간 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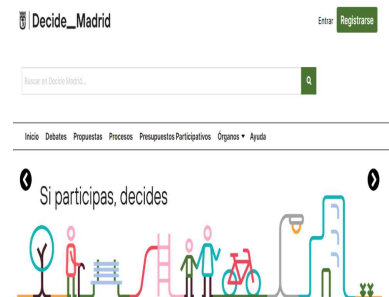
☞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알권리 증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뒷받침

□ 정책 형성·결정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들을 위한 정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 (참여확대) 각 계층의 참여를 확대(접근경로 다변화, 인증수단 확대 등)하고, 부처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안건 발굴
 - (정책반영) 우수제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숙의 후 소관 기관 통보, 제도개선 권고 등의 활동 확대
 - (국민평가) 국민참여 설문결과 및 정책반영 성과를 종합·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 의한 재평가 실시

[사례]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참여 플랫폼(decide.madrid.es)

- (주민제안) 16세 이상 마드리드 시민은 누구나
- (의견수렴) 게시된 제안에 대해 누구나 추가의견 게시,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안은 시민투표
- (찬반투표) 시민협의회, 시민평가단이 제안에 대해 찬반투표 실시(투표인단 마드리드 시민의 2%)
- (사업실행) 선정된 제안은 담당 행정부서가 반드시 실행



□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정보(예산 규모 및 비율 공시) 등 공개('23~)
-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제적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

□ 더 자세한 정보공개

- 예산서, 보조금 등은 국민의 행정감시가 쉽도록 세부내역*까지 공개('23~)
- * [예산서] 최종예산서→상세산출내역 등, [보조금] 지원금액, 내용 등→세부 집행내역 등
- ※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e-나라도움), 지방보조금(보탬e), 민간단체 보조금(NPAS) 등의 시스템 기능 보강 및 개선

□ 알기 쉬운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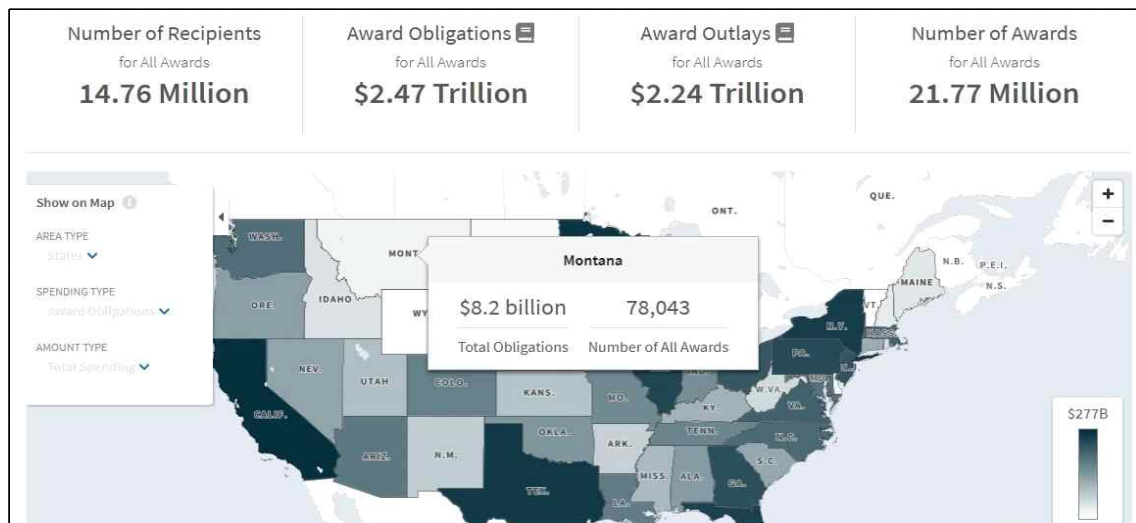
-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문서 단위로 공개하는 '공급자 위주' 방식에서,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하도록 개선('25~)
- 감염병, 교육 등 핵심 이슈에 대하여 자료 분석·가공을 통한 시각화, 연간·분기별 정보공개 요청 통계정보 제공 등 정보공개포털 기능 개선
- ※ (美 정보공개포털) 정부기관별 연간·분기별 정보공개 요청, 처리, 지연 현황 통계 제공(CSV)
(美 재정공개시스템)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정보 분석·가공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
-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행정, 공직자재산정보*(각 기관) 등 사이트별 흩어진 정보를 연계·통합('25~)
- * 정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별로 제공하는 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통합 제공('24년~)

[사례] 美 재정데이터 공개시스템(usaspending.gov)

- ▶ 국민이 궁금한 국가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 주정부별로 재정편성·지출 정보의 공개를 통합하여 제공
- ▶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을 넘어, 공개되는 정보,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석·가공 및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

[美 재정데이터 공개시스템]

- 코로나19 관련 총 지출, 기관별 지출 등을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
- ※ 특별콘텐츠 '코로나' 클릭·검색 결과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정책 형성·결정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계획 수립	확대 운영	확대 운영	확대 운영
②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관심정보 공개 및 선제적 정보공개 기반 마련	자체현금성부정보공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국민참여단 운영	국민참여단 운영	국민참여단 운영
③ 더 자세한 정보공개				
행정감사가 쉽도록 세부내역 공개	현황 분석 및 조사	기능 보강 및 개선	기능 보강 및 개선	운영
④ 알기 쉬운 정보공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체계 개선	현황 조사	기능 개선	정보연계·통합	정보 연계·통합

2.6

디지털플랫폼 기반 지역 혁신

현황 및 문제점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디지털정부의 근간 시스템이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신기술 적용 불가능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

* 시도·시군구의 위생, 도로, 환경 등 22개 공통행정 업무처리를 하는 지방행정 기반 시스템

** 광역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시도) - '04년 구축, 기초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서울) - '06년 구축

※ 최근 5년간 연평균 17,113건 장애발생 및 기술지원 요청 등 장비의 87%가 내구연한 경과

- 지방 공공기관은 기관별 업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이용하거나, 업무상 정보시스템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관도 존재하는 등 표준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 비효율 발생

- 지자체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범위·수준 및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추진체계에 격차 지속

👉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 공공 기관 업무 표준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 '23년 예타 조사 → '24~'27년 단계별 구축·운영
- 시도(17개), 시군구(228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 광역시도(17개) 단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통합관리체계 운영
- 전국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한 무관할*, 무방문 서비스 제공
- *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신청·발급 가능한 46종 민원을 가까운 자치단체 어디나 방문하여 처리

□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효율적 자원 관리 체계 마련

- 지방공공기관이 자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SaaS 형태로 제공

○ 유관 행정시스템* 연계, 공통업무 표준화로 지자체·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소통** 및 과학적 의사결정 환경 조성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보탬e(지방보조금), e호조(예산회계), 클린아이(경영공시) 등

** [예시] 상위기관 의무 제출 데이터(결산자료 등)를 자동 생성 → 온라인 제출·처리

[예시]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사례

- (주요내용) 지자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20~'22)하여, 산하 공공기관(13개 기관)의 업무환경 통합 및 업무처리 전자화* 기반 마련
 - * 종래 일부 기관은 회계, 복무, 자산관리 등 분야에서 수기로 업무처리
- (의의)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기반 효율적 경영자원 관리, 예산절감 등 노력,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 국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혁신 노력이 행정 최일선까지 확산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별 협의체* 운영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역 대학·거점기관·거점기업(선도기업, 스타트업) 등 참여

- 중앙-지방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및 조속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지원
- 아울러, 지역별 성장 격차 해소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디지털 플랫폼정부로 해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토대 마련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ISMP 수립	시도·시군구 22개 행정업무 분석·설계, 개발환경 구축	도로, 교통, 환경 등 15개 행정업무 구현	민방위, 법제 등 행정업무 구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②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	지자체 협의	추진계획 수립 및 분석·설계	통합업무플랫폼 구축·운영	통합업무플랫폼 확대
③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광역자치단체별 협의체 구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3.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3.1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플랫폼 구축

우리의 현주소

- 팬데믹 등의 대응 과정에서 사회 현안을 정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체감했으나,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 참고 : 주요국 민관협업 플랫폼 사례 >

 캐나다	▶ 연방·주·지방 공무원과 대학 인재들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플랫폼으로 더 나은 정책과 연구 의제를 위한 혁신·개방·협력 지향
 유럽연합	▶ 14개국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파트너로 핵심 자원과 서비스를 공동 구축·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 사회문제 발굴 및 정책 설계를 위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상시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고 탄력적인 문제해결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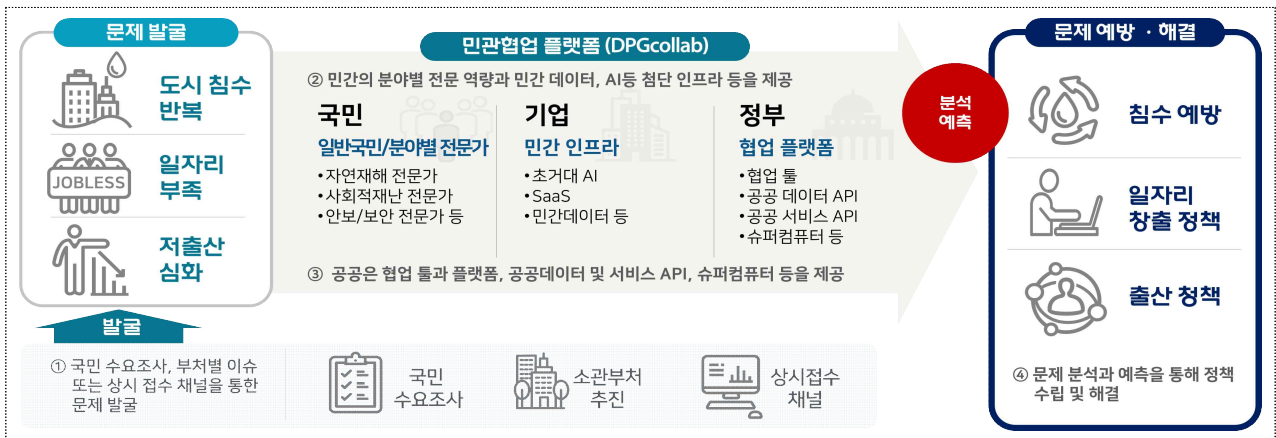
○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 구축·운영('24~)

- * 공공데이터와 활용자가 가진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과 연계·활용되도록 지원
- 정부는 문제해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협업툴, 공공데이터·서비스 API 맞춤형 제공, 분석 인프라(초거대 인공지능, SaaS 등) 등 지원
- 긴급한 사회문제(마스크대란, 백신예약, 재난지원금 등) 발생 시 전문가 및 기업의 참여에 대한 보상체계 및 패스트트랙 마련(~'23)
- 사회문제 발굴·해결방안 제시가 상시 가능하도록 운영(한국형 Kaggle 방식)
- * 문제와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만 제시 → 누구나 도전, 협업, 경쟁하며 문제해결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의 기대효과

- ①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빠르게 사회 이슈·현안 해결
- ② 공무원·기업·학계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
- ③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연구·기술·커뮤니케이션으로 문화 산업 확대에 기여
- ④ 학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프로그램·R&D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 ⑤ 다부처 과제의 빠른 협업과 소통 지원

< 민관협업 플랫폼 개념도 >



[예시]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을 통한 사회현안 발굴·해결

- [침수예측]** 《정부》 하수관로·맨홀, 해수위·홍수위 등 자료 연계 → 유량 예측 등 침수예측체계 고도화
《민간》 딥러닝 기반 강우 예측(6시간 단기 강우 예측)
《해결》 실시간 침수예측체계 운영(침수 발생 3시간 전 실시간 침수위험 알림)
- [미세먼지]** 《정부》 시민 생활권 내 IoT센서 기반 미세먼지 측정 네트워크 구축
《민간》 대기질 성분별 분포 및 고농도 위험 구간 식별 분석
《해결》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고정밀 대기질맵을 제공)
- [대중교통]** 《정부》 교통 네트워크와 이동수요(OD)데이터의 연계
《민간》 대중교통 최적 효과 분석(접근 거리, 최적 차량 대수, 노선 중복) 및 시뮬레이션 개발
《해결》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이용 편의성 및 비용 효율성 평가, 버스경영 합리화, 재정지원 최소화 등에 활용)
- [지진피해]** 《정부》 국내 특화 지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민간》 지진 피해 분석 엔진 개발(온라인 시뮬레이션 기능)
《해결》 노후 시설물 취약성 점검 및 지진 방재 성능 목표치 수립
(지진피해 총량의 정량적 산출로 관련 정책 지원)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시범 사업	시스템 구축 (협업툴, 분석 인프라 등)	전 분야 운용
민간참여 보상체계 및 패스트트랙 마련	보상체계·패스트트랙 마련 계획 수립	보상체계 및 패스트트랙 마련	-	-

3.2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데이터 개방 규모는 급증했으나, 소극적인 기관·담당자, 개방 저해 법령 등으로 민간의 수요와 가치가 큰 데이터의 개방은 여전히 부족
- 특히, 개방된 데이터도 전체 중 일부만 개방(조각난 형태)되었거나,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방되어 데이터의 가치를 온전히 활용하기에 한계

※ '22년 대한민국의 전세계 빅데이터 활용순위는 34위에 불과(IMD 디지털경쟁력)

👉 **국민·기업·인공지능 등 수요자 눈높이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데이터 개방-융합-활용 데이터 전주기 정책 고도화 추진**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

- 국민이 원하는 정부기관의 핵심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 개방하는 '데이터 발굴단(Data Troubleshooter)' 구성

< 개방 대상 고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 >

데이터	소관부처	개방 목표	수요·가치 분야	현재 미개방 사유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3년	정책, 연구, 비즈니스 등 활용 수요 증가 (다른 기업데이터와 결합)	개인정보 및 법인 비밀로 오해
자동차등록 정보	국토부	'23년	차량 관련 맞춤형 안내 서비스 등에 활용	자동차365(국토부)에서만 개방하도록 시행령으로 한정
대중교통(버스·택시·지하철 등) 승하차 정보	국토부 지자체	'24년	생활 환경 및 교통 편의성 분석 등 활용 수요 증가	집계자료 형태(분류·합계·변형 등 통계처리)로 제공 한정
사망 여부 진위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법원 행정처	'24년	사망 여부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	사망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건강검진 데이터	건강보험 공단	'24년	정보주체 동의 하에 의료·복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에 활용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개방 (비식별화, 1백만 건 등)
형·민사 사건 판결서 (전체 기간)	법원 행정처	'25년	리컬테크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소송 감소 및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등으로 제한적 개방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 제한)
집주변 환경 상세 데이터	지자체	'25년	거주·이주 시 생활·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등에 활용	부동산 하락 등의 사유

- 그동안 건수 위주의 데이터 개방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활용도·품질 위주의 '데이터 수요·활용지수체계' 운영**

* '23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활용성 자가 진단모델 설계·구현'과 연계 추진

- 원천데이터 개방을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 ①다수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②한 번이라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공개
③제공된 원천데이터에서 재생성·가공된 데이터는 전체 공개 원칙

**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 개방계획' 이행과 연계 추진

- 공공·민간데이터 융합·활용을 위해 고수요·고부가가치 민간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체계 마련

- 민관의 데이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명세**(목록, 소재지, 형태 등)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AI허브/빅데이터플랫폼(과기정통부), 산업데이터X플랫폼(산업부) 등

- 대국민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위한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 및 DPG 허브와 연계 추진

현장의 목소리

-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개된 자료의 대부분은 공급자가 생성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시각화하고 융·복합하여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D씨)
- ▶ 데이터 공개 요청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수요자가 많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또는 제공이 거절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분석가 P씨)
- ▶ 정부문서가 공급자가 생성하기 편하고 사람이 보기 편한 방식(HWP, PDF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생성기관 및 목적에 따라 여러 형식이 존재하여 디지털화하여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L씨)
- ▶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시간, 비용, 전문성이 필요해 예산 등의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N씨)

□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미개방데이터 제공 확대

- 5대 지역 및 온라인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 미개방데이터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운영(「데이터산업법」 제11조)

- 지역의 주력 산업 수요에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활용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

※ [예: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대전지역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관 및 대전 연구 클러스터 등과 협력·연계하여 추진 예정('23.4.~)

- 데이터안심구역을 연계하여, 이중 데이터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예시] 인구·고용·금융·통신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인구정책 프로세스 모델을 연구한 사례

-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는 온라인안심구역으로 원격 분석환경 제공
- 개인정보안심구역과 시범적으로 연계하여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

□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 창출

-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 적극 추진

- 국민수요·활용가치가 큰 공공서비스 개방 및 민간참여 촉진('23~)

- 행정·공공기관과 민간 간 중계허브로서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구축

* 민간서비스에 공공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단위 기능별 모듈을 오픈 API 형식으로 민간에 개방

- 국민의 이용 빈도,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개방('26년 220개) 확대*

* ['23년 개방 예정] ▲ SRT승차권 예매, ▲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 수목원 예약, ▲ 인천공항 내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서비스 등 6종

※ [향후 개방 방향] 출생·영유아·청년 관련 공공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바우처서비스 등

< 참고 : 융합 서비스 사례 >

구분	당초	개선
기차표 예약	▶ 민간의 지도앱으로 경로를 검색 후, 공공 철도앱을 통해 기차표를 예약 ❶ (민) 지도앱으로 경로 검색 ❷ (관) 철도앱(JRT)기차표 예약	▶ 민간의 지도앱에서 경로검색과 기차표 예약을 한 번에 가능 ❶ (민) 지도앱으로 경로 검색 및 기차표 예약
문화누리 카드	▶ 바우처 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효과, 온라인 사용처 미흡 ❶ (관) 주민센터 방문 대상 확인 및 카드 발급 ❷ (민) 주변 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검색	▶ 간편결제앱 사용을 통한 낙인효과 방지 및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 ❶ (민) 평소 사용하는 간편결제앱을 통해 카드 발급·등록 및 사용

○ 국내 관광정보 종합플랫폼 구현 및 민관 융합서비스 지원('23~)

- 공공데이터·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관광지, 숙소, 교통, 쇼핑, 음식 등)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현
- 관광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광지의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민간에 개방, 국내외 관광객 대상 민관 융합 혁신서비스 개발 촉진

* 빅데이터(이통사, 카드, 내비게이션 등), 콘텐츠(관광지, 스토리 텔링 등) 등의 관광 공공 데이터 개방 + 유관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예시: 사업자 현황 정보 등)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				
데이터 발굴단 운영	수요조사·개방	개방 확대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데이터 수요·활용지수 체계 운영	계획 수립	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	적용 및 공개	적용 및 공개
원천데이터 개방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조사 및 원칙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제공	-
민·관 데이터 플랫폼 명세 개방	BPR/ISP	DPG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DPG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	ISMP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3단계 구축
②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미개방데이터 제공 확대				
지역거점 안심구역 확대	-	지역 1개소 구축	지역 1개소 구축	지역 1개소 구축
안심구역 연계	협력체계 구성	연계 인프라 구축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연계·활용
온라인안심구역	원격 제공 가능한 데이터 대상 선정 등 방안 수립	온라인안심구역 서비스 구축	서비스 제공 확대	서비스 제공 확대
③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개방 개수 확대(누계)	20개	50개	120개	220개
관광 정보 종합플랫폼 구현	관광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관광 관련 데이터 개방 확대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관광 정보 종합플랫폼 구현 및 개방 확대

3.3

디지털 트윈을 통한 AI·데이터 산업 퀀텀 점프

현황 및 문제점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사업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에 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분야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미흡하고, 지방 및 공공·민간시설의 지능화도 더딘 상황

※ 대한민국의 분야별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21. WIPO) : (ICT인프라) 1위, (일반인프라) 11위

☞ 중점 추진 분야 중심의 디지털 트윈 메가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간인 인공지능·데이터산업의 획기적 도약 기반 마련

□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한 AI·데이터 산업 성장기반 마련

- 국가 주요 인프라 관리·운영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추진 → 주기적으로 현행화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 구현

* 디지털 트윈: 현실세계의 사물·공간을 복제하여 가상공간으로 구현, 현실세계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실시간 동기화하여 분석, 예측, 최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 기존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는 DPG 허브(데이터레이크)와 연계, 신규 데이터는 원천(Raw) 데이터 형태로 DPG 허브에 저장
- 축적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서 개방하고, 데이터·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응용분야 간 연계 강화 및 활성화 촉진

* 분야별 플랫폼 간 데이터와 서비스 연계·확장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표준화·확산

- 디지털 트윈 활용을 위한 다양한 2D·3D 공간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민간 산업 지원을 위한 분석·시뮬레이션 기능 및 OpenAPI 서비스 확대** 추진

* [K-Geo플랫폼] 행정·공공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 [브이월드, LX플랫폼] 민간·공공에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데이터, OpenAPI, 지도 서비스, 분석 기능 등) 제공 플랫폼

-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고, DPG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범정부 '디지털 트윈 전략' 수립('23)

* '22-'27년까지 연평균 60.6% 성장하여 '27년에 735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M&M)

- 각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 국내 기업의 디지털 트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과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수출 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핵심기술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지능형 AIoT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확대* 등 주요 분야별 핵심 기술** 활용 촉진 및 대규모 기술 개발 추진

* 정부의 다양한 지능형 제품·서비스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 확대 추진

** AIoT, AI·빅데이터, 3D CAD, AR/VR/MR, 스마트센서, 디지털커넥트, 개인정보 연관 분야 등

- 시뮬레이션 SaaS 개발(예: 수치해석 모델) 등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다양한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기기 등 커넥티드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초연결'하여 민간기업 간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기술개발 지원 및 개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디지털 트윈 데이터 활용 활성화 유도

※ [사례 : EU] 스마트 가가계류소비재 생성 데이터를 기업들이 타 기업과 쉽게 공유하는 방안을 포함한 데이터법 초안 발표('22.2월 EU집행위) → '28년까지 GDP 증가 효과 2,700억 유로(약 360조원) 기대

- 디지털 트윈 시범·실증사업 추진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확산

- (시범도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축·적용할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민편의 향상 관련 디지털 트윈 구축비용 지원 검토(예시: 국비 50~70%)

- (실증사업) 다중이용 시설 편의 제고, 대형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고 예측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체감도 높은 실증사업 추진

※ 아현동 KT지사 화재('18.11),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 각종 물류창고 화재 등

□ ‘디지털 트윈 코리아(가칭)’ 추진

○ 4대 중점 분야(교통·안전·에너지·도시) 집중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① (교통) 각종 교통정보(도로, 차량, 교량·터널 등 교통시설)의 실시간 동기화 및 3D 기반의 정교한 예측 모델 구축을 통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및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차량·도로 정보의 동기화*, 안전운전 지원 등에 대한 기술표준 제시**,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한 시설물의 형태·구조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도시 교통 관리 최적화 및 자율주행 활성화

* 소요 시간 측정, 시설 파손·교통 사고 감지 및 위치 확인 등

** 졸음 운전 및 주의 분산 경고, 보행자 탐지 및 경고 등

- 공항·항만 시설의 운행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통해 최적의 운행 관리 및 대형사고 예방**

*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20~’24)과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고도화 추진

** FAA(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2년에만 1,732건의 활주로 이탈 사건 발생. 충돌직전 회피한 사고는 JFK 국제공항(‘23.1.13),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23.2.4) 등

- 혼잡한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실시간 혼잡 정보 제공 및 최적 탑승·보행 경로 제시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광역권 또는 국외 이동 시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제공

* 핀란드 뮌(whim)은 기차, 버스, 택시, 공유자전거, 렌트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연계하고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16~)

② (안전) 각종 자연·사회 재난, 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예측 모델 구축 및 최적화된 대응 방안 제시

- 지상·지하 침수위험 탐지, 조기 감지·경보 및 건설현장 폭우 대응 등 각종 안전 기술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폭우·폭설 대응

- 상·하수,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 및 지반상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지반침하 안전도 예측 기술 및 실증서비스 개발
 - 지진 및 산사태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거·기반 시설 보강 및 사고 시 건물·시설물 긴급 복구 지원
 - 화재·폭발 등에 대한 AI·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 구축을 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최적의 피난 시나리오 마련 등 지원
 - 교통·안전사고 등 보행 중 사고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및 최적 개선방안 마련
- ③ (에너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에너지 생산, 공급, 유통, 소비, 회수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연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
- 발전소에 대한 가상의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최적의 제어 방안을 전력 수급 효율화에 활용 등
- ④ (도시) 스마트 계측·관제 기술을 활용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데이터 표준화)하고,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
- * 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등
- 지하공동구의 이상발생(화재·침수 등) 모니터링, 초동대응 및 재난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지원 플랫폼* 개발
- *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재난 피해확산 예측, 현장 중심의 예방·대비·대응 기술개발 추진
- 디지털 트윈 4대 중점분야 외에 환경, 교육·훈련, 문화, 행정, 의료,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진('25~, 전 부처)

[예시] 초연결 디지털 트윈 단계적 확산 분야

- ① **[환경]** 정밀하천지도를 기반으로 강수량·바람·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수질 오염도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물관리 체계화 등
- ② **[교육·훈련]** 소방·경찰·대테러 등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위험 상황 가상 체험을 통해 숙련도 향상, 학생 대상으로 가상 현실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
- ③ **[문화]** 국보급 유무형 문화재를 가상공간에 박물관으로 구현하여 관람, 복원·대응 지원,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재난 상황 예측대응, 문화재 발굴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사전 예측 등
- ④ **[행정]** 정부·공공 청사 등의 보안 및 시설 안전, 공공데이터센터 관리 등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모델을 통해 행정기반 시설 관리 최적화

□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효율적 의사결정 지원

* [예시] 공장설립 시 민원인의 선호(지역·업종·규모), 실거래가·업종별집적도 등 입지매력도를 종합 분석하여 최적 후보지 추천(팩토리온) → 후보지 대상 도시계획선·건폐율·용적율 등이 자동으로 반영된 시설물을 입체도면으로 제공(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입체도면(간략설계)과 사업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 인허가 가능 여부 안내

* 정식 신청 시 토지 매입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약식 사전심사제도(「민원처리법」 제30조)

- ' 시도새울'(지방행정시스템), 부처별 별도 시스템을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에 연계하여 사전진단에서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제공

- 개별 시스템(팩토리온, 세움터 등)으로 운영되는 인허가를 대상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하여 우선 적용 후 단계별 확산

- 지자체별 평균 처리 기간 등 각종 통계 데이터를 공개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AI·데이터산업 원팀 점프 기반 마련				
범부처 디지털 트윈 전략 수립	디지털 트윈 핵심 제품·서비스 선정	지원사업 확대 및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 R&D 지원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 R&D 확대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 실증 및 R&D 고도화
민간기업의 융합서비스 개발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 포함)	인센티브(안) 마련(법제도 등)	융합서비스 개발 인센티브 제공	융합서비스 개발 인센티브 확대
② 디지털 트윈 코리아 추진				
4대 중점분야(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축 및 시범·실증 추진	4대 중점분야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축 세부시행방안 수립 (시범·실증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포함)	중점분야 분석·예측시스템 구축 지원 및 시범·실증사업 실시	중점분야 고도화 및 중점분야 외 분석·예측시스템 구축 지원과 시범·실증사업 실시	국가 전체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확산
③ 인허가 사전 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시범모델)	시스템 개발 * ISP 수립(팩토리온)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정식 개시·운영 및 단계별 확산	
원(One)사이트 포털 구축(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연계)	인허가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BPR/ISP	원사이트 포털 구축 및 시범운영 (차세대 시도새울, 개별시스템 등 연계)	정식 개시·운영 및 단계별 확산	

3.4

GovTech 기업 성장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SW 시장에서 SaaS 기업의 비중은 3%에 그치고 있으며, 저조한 클라우드 활용* 등으로 경쟁력 있는 SaaS 기업도 부족**

* 클라우드 이용률(OECD, NIA, '20) : OECD 평균 44.25% vs 한국 24.9%

** 미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SaaS 기업 14개, 우리나라 SaaS 유니콘 1개

*** 국내 디지털서비스 중 SaaS 유형은 14.9% 수준(IaaS 66.34%, 클라우드지원서비스 14.2%)

- 프랑스, 일본은 디지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재편 중이며, 영국은 GovTech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타트업 육성에 안간힘

* (EU) 신산업전략 스타트업 이니셔티브('20), (일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22)

👉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공공부문 SaaS 도입을 선도하고, 누구나 마음껏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GovTech 스타트업 육성 촉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략적 육성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인 SaaS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국내 SaaS 기업('21년 1,102개)을 1만 개 이상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내 SaaS 확충을 위해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까지 SaaS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

* ① SaaS스타트업, ② SW기업 → SaaS전환, ③ SaaS고도화, ④ 글로벌向 SaaS연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란?

- ▶ [개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 방식 중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서비스

* 클라우드는 HW/SW 등의 정보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

- ▶ [장점] ▲시스템 구축 비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 ▲최상의 서비스 업데이트 비용 등 서비스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절감

- 모태펀드·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방식 등으로 SaaS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자금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실적 인정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비금융권 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기관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면제, 중기부 수·위탁거래실태 조사(격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부여 등

- SaaS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애로요인 진단, 맞춤형 솔루션 제안, 시장분석 등 체계적 SaaS 전환 컨설팅* 제공 및 전환비 지원

* SaaS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존 SW의 SaaS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혁신센터' 활용 확대

- 클라우드 교육거점을 통한 재직자 중심 고급 SaaS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마련하여 필요인력 확보 지원

* IT 전공·비전공자 대상 민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복수강 허용, 수요 맞춤형 교육, 산업현장 인턴십 개발 및 주말·야간 교육 확대 등

- 중소 SaaS 기업과 CSP 기업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SaaS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수요가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행정·공공기관용 서비스를 민관합동으로 발굴하여 SaaS 개발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

* [예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AI기반 수어 변환 서비스, 공공용 통합메시징 서비스, 민원 사무처리를 위한 민원관리 서비스 등

□ 혁신서비스 신속 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절차 간소화·유연화 추진

- 신규 정부 업무시스템 구축 시 민간 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우선 활용

- S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 관련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등 검토

* 공공부문 SaaS 활용 사례: 메일, 영상회의·영상상담, 채용·인사·성과관리, 업무협업, 도서관관리, 출입관리, 전자행정서식, 시설·IT 인프라 종합관제, AI 챗봇, 보안점검

- 신속한 정부 업무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등 기술발전 트렌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SP제도 개선 검토

* 현재 정보화시스템 기획에서 구축까지(ISP 포함) 최소 2~4년 소요

-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혁신서비스 촉진('23~)

* 공공시스템 구축 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SW사업**

- 민간투자형 SW사업 확산을 위해 선도 사례 적극 발굴

□ 창업 · 성장 · 혁신네트워크 · 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

- GovTech 관련 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24~)

- DPG 철학에 맞는 대국민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가칭)DPG 100+’ 운영

* 유망SaaS육성프로젝트사업(과기정통부) 등과 연계 및 지원 확대 추진

- GovTech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강화를 위해 보증지원 우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스타트업 적극 투자 지원, 벤처대출**(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제도 도입 추진

* 신규 조성 중인 초격차 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

** 금융기관은 초기 대출 후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대출금을 상환받고 융자 당시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 가능

- 지역 스타트업이 데이터, 컴퓨팅파워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권역별 ‘(가칭)DPG 혁신네트워크’ 구축('24~)

- 핵심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공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창업 공간 마련

- 권역별로 앵커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지원기관 등을 매칭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GovTech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23~)

- 기존 SI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아닌,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대중소 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수출지원 사업 확대 추진

-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출 지원 관련 업무 협력** 추진

*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 자문을 제공('04년~)하는 사업으로 협력대상은 ODA 수원국 + 非ODA 국가(비용 부담)

**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희망하는 페루(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 및 인증제도 구축, '18), 파라과이(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개발, '21) 등과 후속 협력사업 추진

- 분산된 해외 진출 지원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관련 민간 협회·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해외진출사업과 연계 및 유망 SaaS 기업 발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매칭하여 글로벌시장 진출기반 마련, 민간 기업·단체의 스타트업 투자 네트워킹을 활용해 우수 SaaS 기업 등의 해외투자유치 지원 등

- 월드뱅크 등 국제개발기구와 협력,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참고 :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 개최(안)>

- GovTech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 개최 추진 검토

- 개최방안 : 위원회, 중앙부처, 민간합동 추진을 원칙으로 관계부처 행사 연계 검토
- 주요내용 : ① (데모데이) AI·데이터·SaaS·디지털 트윈 등 GovTech 관련 기업의 기술·서비스 시연 및 투자연계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지원
② (비전확산)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상 제시, 기관별 정책 시상, 유공자 포상 등

【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략적 육성				
SaaS 생태계 지원(동반성장평가 실적인정)	동반성장 평가 반영 협의 (평가항목, 점수 등)	동반성장 평가 실적인정 시행		
SaaS 전환 컨설팅 지원	실행계획 수립	SaaS 전환, 개발환경 및 컨설팅 등 지원(20건)	SaaS 전환, 개발환경 및 컨설팅 등 지원(30건)	SaaS 전환, 개발환경 및 컨설팅 등 지원(50건)
SaaS 전문인력 양성	SaaS 전문인력 확보 계획 수립	주요 권역별 SaaS 교육 거점 운영(4개소)	주요 권역별 SaaS 교육 거점 운영(4개소)	주요 권역별 SaaS 교육 거점 운영(4개소)
민관합동 SaaS개발 지원 시범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및 행정·공공기관용 서비스 과제발굴	민관합동 발굴 SaaS개발 시범사업 수행(2개)	민관합동 발굴 SaaS개발 시범사업 확대(4개)	
② 혁신서비스 신속 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절차 간소화·유연화 추진				
공공분야 SaaS 퍼스트정책 실현	관계부처 합동 SaaS 우선 활용 분야 선정			
정보화사업(ISP) 절차 간소화 추진	ISP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 수립	ISP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ISP간소화·완화 관련 시범적용	ISP간소화·완화 지침 반영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AI기반 어린이집 급식관리시스템 우선 구축	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 발굴 및 추진
③ 창업·성장·혁신네트워크·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DPG 100+ 운영	GovTech 창업지원 방안 마련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 지원 (20개사)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 지원 (30개사)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 지원 (50개사)
GovTech 기업 자금지원 강화	우대보증 실시 및 초격차펀드 조성	벤처대출 제도 도입 및 투자지원 확대	벤처대출 제도 확대 및 민간투자 확대 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DPG 혁신네트워크 구축	DPG혁신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혁신네트워크 권역 선정 (1개)	혁신네트워크 권역 선정 (1개)	
DPG 해외수출 추진	해외진출 관련 협업체계 구축	월드뱅크, EDCF 등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별 시장진출	DPG 수출 본격 추진	

3.5

공공분야에 민간의 최신 시기술 적극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복지·재난 등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 필요

☞ 초거대 인공지능 등 민간의 혁신기술 활용하여 복지, 재난, 청년 등 사회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

※ 복지·재난·청년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26년까지 사회적 파급효과·공감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저출산/고령화 등 핵심 사회 현안 발굴

□ [복지] 꼼꼼히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마련('23~)

- 본인, 이웃*, 신고의무자(의료인 등) 등의 신고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전 국민 복지 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 임대인, 아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배원, 검침원 등이 민간·공공 앱을 활용하여 신고 가능

** 신고정보 DB화를 통해 전국단위 통계·실적 관리, 분석·반영 등으로 선순환 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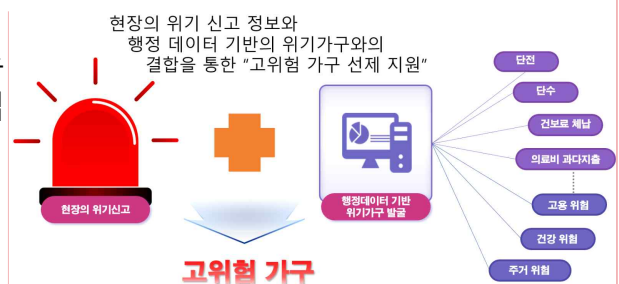
- 위기 발생 전,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발('23~)

- 전가·상수도·통신 체납, 실거주지 정보 등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연계하여 필요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

* 민간 보유 거주지, 위기 징후 패턴, 생애주기별 특성 등 통합 활용 추진

📢 복지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례)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복지 위기를 포착해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불가
⇒ 위기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 소재 파악과 복지서비스 안내지원 가능



○ ‘발굴-상담-공감(관리)’형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도입(‘23~)

- AI가 돌봄 대상자(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여, 건강 이상 유무 확인, 심리적 안정을 지원
- 안부 전화의 대화 내용 정리와 특이사항 통보로 복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돌봄대상자를 더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예시]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 돌봄 지원(‘23~)

- 독거노인 등 고령층 대상 인공지능 스피커, 생체정보 측정기기, 앱 등을 연계한 복약 알림, 감성 대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건강관리 미션, 혈압·혈당 등 측정·관리, 치매예방 콘텐츠, 119 연계 응급콜

○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 도서·산간·벽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튜터 솔루션, 정서 진단 서비스, 난독증 진단·개선 서비스 지원

□ [재난/재해] 먼저 찾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 실시간 사건 및 빠른 위험 탐지를 위한 민간 역량 활용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사회문제 발굴·분석시스템 개발
- 국민이 돌발상황에서 도움을 어디서 원하는지 SNS, 뉴스,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빠른 경고를 주는 ‘First Alert 서비스’ 제공

○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안전경비 플랫폼 구축

- 5G·사물인터넷·AI·클라우드를 활용해 특정 지역·시설의 공공 위협 요인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 공공장소, 공공기관, 국가 기반시설 등의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자산 보안 강화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119 신고접수 플랫폼' 구축

- 신고 전화 급증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119 접수 및 긴급도 분류 지원,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재난신고 접수 및 대응
- 지역별 분산된 인적·물적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및 전국 소방 출동을 위한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현

○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밀집 위험 상황 예측·분석시스템 도입

-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밀집 위험 상황 예측·분석

[예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재난신고 업무대응 서비스

- ◇ 인공지능이 동시다발적 재난신고에 대해 긴급·중요여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하여 알려줌으로써 현장 인력의 대응 효율성 극대화 ⇨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마련



○ 범정부 재난관리 쉼 단계 통합·연계 체계 구축(가칭 재난관리24)

-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27종)을 통합·연계하여 단일인증 웹사이트('재난관리24' 포털) 구축

- 지자체 IoT 센싱정보를 연계하여 GIS 상황판에 표출하고 위험감지 시 상황전파 메시지로 전파하여 기관 간 재난상황 공유·협업 지원
 - 재난현장 등에서 상황전파, 피해조사, 이재민구호,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 활용체계 구축
 - 대국민 재난안전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가칭국민안전24)
 - 분산된 재난안전 서비스를 예방부터 복구(피해지원) 단계까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한 곳('국민안전24')에서 제공
 - 접근성·편리성 향상을 위해 민간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과 서비스 연계
 - 인공지능 융합 유해 화학물질 판독시스템 개선
 - 화재,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방관이 조기에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진압·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불의 색, 연기형태, 폭발열 등
- 인공지능 기반 산림해충 방제 지원
 - 현장 출동 없이 드론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산림병해충을 실시간 탐지하고 고사목의 위치·범위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초개인화 맞춤형 청년서비스 확대

-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플랫폼 구축
 - 우울 상태, 활동 정보 등 마음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공공·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진단·분석·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 검진, 진료, 처방, 생활습관, 상담정보 등의 데이터를 개인동의 기반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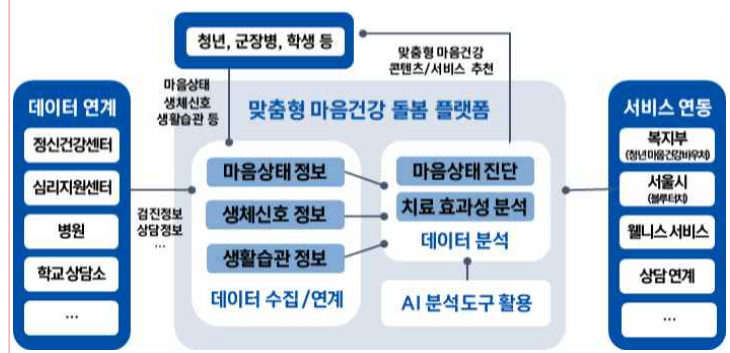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단·예측한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공공·민간의 다양한 돌봄 콘텐츠·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 마음건강 위기에 선제적·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예시) 마음건강 상태·대상별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 상담·진료 필요시 센터·병원 선제적 연계·추천, 위기발생 시 보호자 통보 등

- 특히 청년·군장병·학생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마음건강돌봄서비스

◇ 인공지능이 학생·청년·군장병 등 마음건강 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및 일상생활 데이터(각종 요금납부 현황, SNS 등)를 종합분석, 마음건강·우울상태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위험상황 감지 시 보호자 통보 등 제공



○ 청년정책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4,000여 개의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알림 제공

* 인공지능 기반으로 청년정책 정보와 개인 특성 정보(성별, 연령, 소득, 주소 등)를 결합·분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 추천

[사례] 청년정책 맞춤형 추천·알림·신청 서비스

- ▶ (추천) 수많은 주거정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소득·자산·가족관계·거주지 등 청년 당사자의 조건에 맞춰 현재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천(예: 청년 행복주택)
- ▶ (알림·신청) 취직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매년 갹신이 필요한 채무자 정보 등록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담당기관 웹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 현재 대상자 100만 명 중 20만 명가량이 누락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과태료 처분

□ [행정] 정부 전용 초거대 AI Assistant 구현

- (1단계) 공개된 정부 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제공하여 AI를 활용한 문서작성(보도자료·연설문 등) 지원 실증사업 추진('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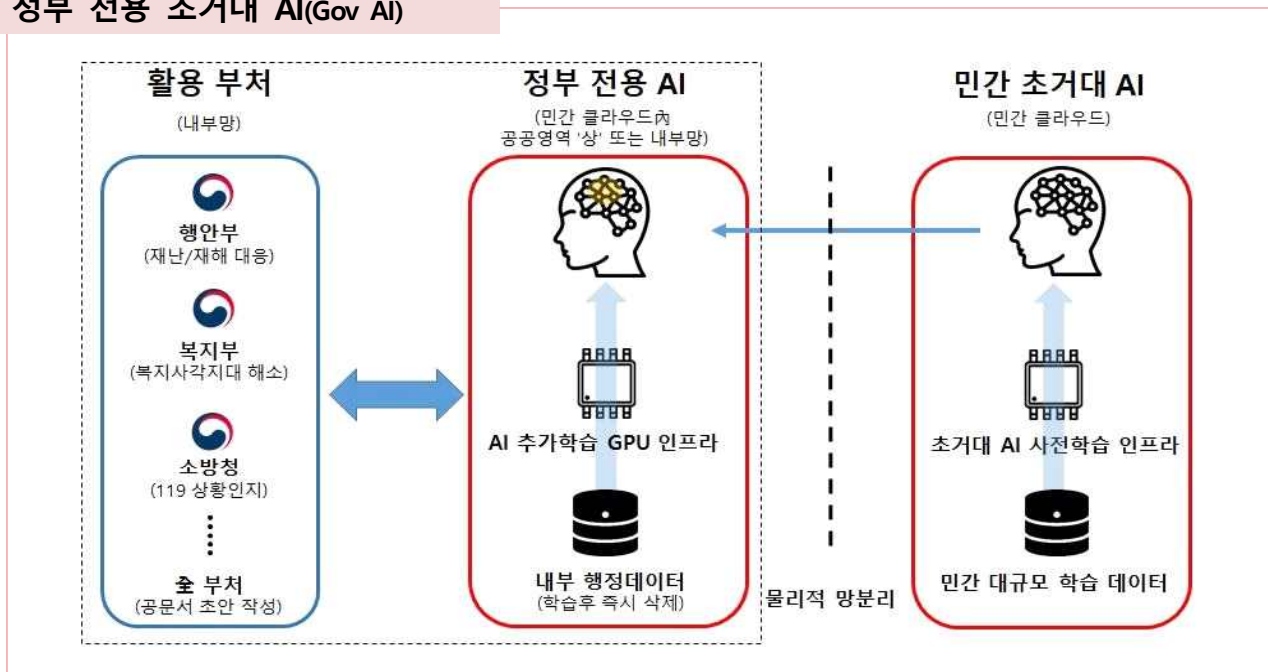
* 온나라 생성 문서(250만건), 보도자료(35만건), 전문자료(10만건), 법령 및 유권해석(33만건) 등

- (2단계)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안성이 담보된 별도 영역에서 정부 전용 AI 추진

-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 행정데이터를 학습시켜 정부 서비스의 정확도·정밀도 향상('24년~)

※ [활용예시] 재난/재해 대응,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정부 전용 초거대 AI(Gov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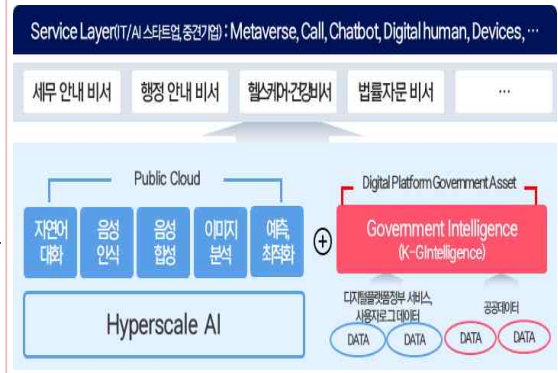
□ [민원]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민원 상담

-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상담해주는 초거대 인공지능 대화형 민원도우미* 구현

* 사용자경험(UX) 극대화를 위해 국민이 편리한 대화형 서비스(ChatGPT형)로 제공 (다국어 지원, 음성인식·다양한 디바이스 확장 기능 등 포함)

[예시] 초거대 인공지능 대화형 민원도우미(안)

- ▶ (1단계) 정부 민원처리 매뉴얼, 민원정보, 질의 내역 등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간단한 민원 신속 안내·해결
 - ▶ (2단계) 복잡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별 사용자(데이터)를 이해·학습해가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안내와 처리까지 제공
- ※ 소규모 지자체서비스 실증평가 → 대상 지자체서비스 단계별 확대



□ [기타] 의료, 소상공인, 교육, 내부행정, 조달 등

과제(안)	주요내용
공공병원 대상 AI·디지털 의료 확산	산재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질환 진단 AI 시범 도입 지원
소상공인 대상 AI콜센터, 챗봇, AI솔루션 도입	음식점 등 점포환경·수요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점포 8천여 곳에 AI 콜센터·챗봇, 영업관리 AI 솔루션, 약자용 키오스크 등 지원
AI기반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중·고 학교별로 AI 기반 학습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 지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능형 국가기록물 서비스 제공	기록물 요약 및 연관어 추천, 맞춤형 기록 추천, 열람 상담, 원스톱 열람 처리 등 AI를 적용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AI-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조달 추천	조달 데이터 분석, RFP 의미추출, 주요 기업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한 맞춤형 공고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및 컨설팅 등 혁신서비스 제공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복지] 꼼꼼히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마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복지 위기 알림·신고 체계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복지 위기 알림·신고 체계 운영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복지 위기 알림·신고 체계 운영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복지 위기 알림·신고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도입	복지 대상 발굴 인공지능 개발, 시범 운영	복지 대상 발굴 인공지능 전면 시행 (차수별 20만)	인공지능 발굴 정확도 분석	상담·공감형 인공지능 개발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 돌봄 지원 (누적)	보건소 120개소 AI 기기, 생체정보 측정기기 보급	보건소 160개소 AI 기기, 생체정보 측정기기 보급	보건소 200개소 AI 기기, 생체정보 측정기기 보급	보건소 261개소 AI 기기, 생체정보 측정기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기획 및 예산 확보	11개 보육원 (5,036명)	11개 보육원 (5,036명) ^{계속}	11개 보육원 (5,036명) ^{계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2] [재난/재해] 먼저 찾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문제 발굴·분석 시스템 개발	필요 데이터 통합·개방 추진	사회문제 발굴 및 분석시스템 개발	-	-
인공지능 안전 경비 플랫폼 구축	플랫폼 초기 구축 및 시범 운영	AI 관련 운영 데이터 확보	AI 고도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능형 119 신고접수 플랫폼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ISMP	지능형 신고접수 플랫폼 개발	지능형 신고접수 플랫폼 활용
법정부 재난관리 3 단계 통합·연계 체계 구축	예산 요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재난안전시스템 통합(1차) 및 IoT 연계·전파	재난안전시스템 통합(2차) 및 모바일체계 구축	재난안전시스템 통합(3차) 및 모바일체계 고도화
대국민 재난안전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	예산 요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국민서비스 통합(1차) 및 반응형 웹·간편인증 적용	대국민서비스 통합(2차) 및 위치기반서비스	민간 플랫폼 개방 및 챗봇 서비스
밀집위험 상황 예측·분석시스템 도입	예측·분석시스템 시범 구축 및 운영	예측·분석시스템 운영	지능형 CCTV 활용	-
인공지능 유해 화학물질 판독시스템 개선	AI 솔루션 개발	화학방재센터 실증	-	-
인공지능 기반 산림해충 방제 지원	AI 솔루션 개발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실증	-	-
[3] [청년] 초개인화 맞춤형 청년서비스 확대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플랫폼 구축·제공	-	-
청년정책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청년정책 데이터 개방(Open API 등)	민간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청년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
[4] [행정] 정부 전용 초거대 AI Assistant 구현				
정부 전용 초거대 AI(Gov AI)	Gov AI 시범사업	BPR/ISP	Gov AI 시범 운영	Gov AI 운영 및 고도화
[5] [민원]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민원 상담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민원도우미 구현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원상담 관련 데이터 구축	-	개방 데이터 업데이트 및 서비스 구축 검토
[6] [기타] 의료, 소상공인, 교육, 내부행정, 조달 등				
공공병원 대상 AI·디지털 의료 확산 (누적)	공공병원 4개 의료 AI,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보급	공공병원 8개 의료 AI,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보급	공공병원 23개 의료 AI,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보급	공공병원 43개 의료 AI,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보급
소상공인을 위한 AI 콜센터, 키오스크 지원(누적)	스마트 상점 1,000개사 지원	스마트 상점 3,000개사 지원	스마트 상점 5,000개사 지원	스마트 상점 8,000개사 지원
AI 기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	AI 기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	AI 기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3·4, 중1, 고1)	AI 기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5·6, 중2·3)
지능형 국가기록물 서비스 제공	기록물 내용요약 등 검색데이터 확충 및 품질 정비	포털 검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MP 추진	포털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포털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AI-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조달 추진	간편 조달 추천 서비스 개발 지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	

4.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4.1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국민의 권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정부 간 데이터 개방·공유, 민간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채널확대 등 변화되는 환경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 국민불안 의식조사('22., 통계청) : (1위) 개인정보 유출, (2위) 신종질병, (3위) 범죄 등

👉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유통·관리로의 전환

□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23~)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제35조의2) 등

** [예시] 「의료법」상의 환자 진료정보 송부 등 보건·복지·통신·교육 분야 등에 존재하는 마이데이터 저해 법령 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정비

- 국민이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마련 추진('23년 ISP 등)

- 전송이력 조회, 전송요구·중단 등 개인정보를 스스로 확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종 분야 간 데이터 형식·전송체계 표준화 및 선도서비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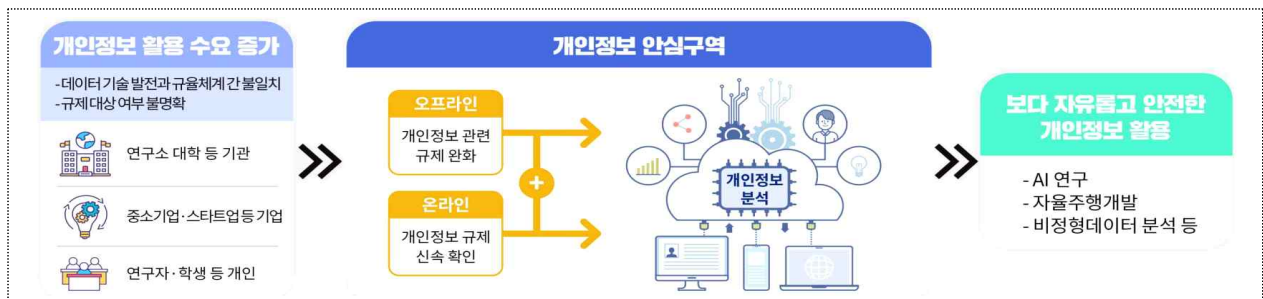
- 이종 분야 간 원활하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마이데이터 보안·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23)

- 표준화 데이터 등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추진

□ 개인정보안심구역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추진('23~)

- 가명정보 활용 절차 표준화·명확화 등 가명처리 및 결합제도 개선
- 인공지능 연구, 자율주행 개발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안심구역 도입 추진
 - 개인정보안심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1단계) 현행 제도 내 가명처리 수준 완화 → (2단계) 제도개선 후 개인정보 활용 확대
 - 결합전문기관(26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5개)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
 - ※ '데이터안심구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심구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검토

< 참고 : 개인정보안심구역 개념도(안) >



- 사회문제 해결 및 혁신 기술·산업 육성 등을 선도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실증사업' 도입·추진
 -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부터 사업화 단계까지全过程 원스톱 지원
 -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개발 지원
- ※ (지원 요건) ①이종 산업간 가명정보 결합, ②공공성(사회문제해결), ③신기술 활용·개발 목적, ④특별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안심구역' 활용

< 참고 : 가명정보 활용 실증사업 추진 흐름도 >



-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인공지능 학습·개발시 개인정보를 보호·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R&D)*('24~)
 - * 인공지능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검증 기술 등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특화 전문 인력 양성(R&D) 추진('24~)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주요 공공시스템별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저장·분석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23~), 비정상적 접근 차단 등 기능 고도화('24~)

[사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 점검('22.8~12월) 결과

▶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보유 등 주요 시스템 1,515개에 대한 조사 결과, 1,015개 (67%)가 접속기록 점검 기능을 미보유하거나 이상행위 탐지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

- 기능 고도화와 연계하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내역을 추적 (Back-Tracking)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민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
 - 국민 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신뢰성을 점검·개선하는 개인정보 보호 평가체계* 강화
 - *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23),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2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24), 중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모니터링·신고하면 정부가 확인·점검하여 피해를 방지
-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통제권 행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민관 기관 활성화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령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하위법령 검토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 ISP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관리, 과금 보상체계 등 연구	플랫폼 서비스 시행	플랫폼 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표준화 및 선도서비스 추진	마이데이터 보안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마이데이터 표준규격 개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개발 추진	마이데이터 표준규격 고도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확산	-
②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추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공통기준 마련	분야별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	-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확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운영(1단계) 및 제도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확대 운영(2단계)	-
가명정보 활용 실증사업 추진	수요조사 및 세부지원요건 마련	실증사업 추진	실증사업 확대	실증사업 확대
개인정보 특화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확보	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 추진, 5개 대학(원) 지원	연구개발 추진, 5개 대학(원) 지원	연구개발 추진, 5개 대학(원) 지원
③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및 기준 마련, 단계적 이행실태 점검	단계적 이행실태 점검	단계적 이행실태 점검	이행실태 점검 대상 확대 실시
개인정보 보호 평가체계 강화 및 유출 대응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영향평가 기준 등 정비, 모니터링·신고 확인·점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모니터링·신고 확인·점검	개인정보 보호 평가제 시행, 모니터링·신고 확인·점검	개인정보 보호 평가제 시행, 모니터링·신고 확인·점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지원 방안 마련	전문기관 지정·지원 등 추진	전문기관 지정·지원 등 추진	전문기관 지정·지원 등 추진

4.2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민·관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개방·공유·융합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환경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노출

※ 미국정부는 새로운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추진(대통령 행정명령, '21)

※ EU는 사이버 회복탄력성 법(Cyber Resilience Act, '22.9)을 제안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해 사이버 회복탄력성 프레임워크와 안내서를 제공 중

전통적 정부 시스템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
망분리 기반의 폐쇄형	민간 클라우드 등 개방형
PC 기반 대면 업무	모바일 기반 비대면 업무
자체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외부 서비스 이용

☞ 전통적 보안체계(폐쇄형·경계형)를 재검토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확보 및 민·관 협력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이용 환경(사람, 기기, SW, 네트워크 등)과 같은 모든 요소를 원점에서 검증하여 보완하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 추진

※ 제로 트러스트·공급망 보안 연구·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 확대('24~)

- 칩(Chip), 서버, 네트워크 장비, 라이브러리 등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공급업체를 명세화하고 관리하는 공급망 보안 도입

□ 적극적인 보안기술 개발·적용으로 세계적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 능동 탐지·대응 및 AI·6G 등 신기술 분야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 교육 확대 등 인적기반 확충 및 최정예 보안 개발자 양성

※ 민간에서 검증된 보안 신기술(인공지능, 동형암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적극 적용

※ 보안 기술개발 → 실증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활용 추진

- AI, 클라우드, 융합보안 등 新기술 기반 보안 산업 육성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개선 등을 통한 보안 역량 제고

□ 민관 상시 보안 협력체계 구축 및 회복탄력성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 장애·보안사고·재난 등을 대비하여 「민관 합동 종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응체계** 마련('23~)

* 민·관 합동 사이버위협 등 통합모니터링 및 실시간 공유채널 마련

**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기업-정부 간 공동 협의체 및 상설 대응조직 구성

- 주요 서비스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버그바운티 등)·개선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정립 및 회복탄력성* 확보('24~)

*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 개선, 백업 등 신속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최신기술 검증·도입 및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추진 등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세부과제	'23	'24	'25	'26 이후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환경에 적합한 보안 체계 마련				
제로 트러스트 도입	협의체 구성, 적용방안 마련·실증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대상 실증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적용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적용 확대
공급망 보안 도입				
② 보안 신기술 개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보안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사업 추진	기술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사업 추진	R&D 예타 사업, 인력양성 사업 추진	R&D 예타 사업, 인력양성 사업 추진
신기술 기반 보안산업 육성	산업육성 사업 및 보안인증 기준 마련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③ 민·관 상시 보안 협력체계 구축 및 회복탄력성 강화				
민·관 상시 보안 대응체계 마련·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종합모니터링 체계, BPR/ISP, 취약점 점검 등	종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취약점 점검 등	종합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취약점 점검 등

VI. 추진 동력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중심의 실행력 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범정부적 확산,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획·조정, 예산사업 검토·조정 기능 강화

*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 및 지원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정책 조정, 예산 편성·집행, 평가, 교육 등 소 순기에 대한 관리 강화

□ 정책 조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공통표준, 지침, 가이드라인 제정·권고
 - 데이터 정책 수립, 초거대 AI·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최신정보기술 도입, 디지털서비스 구축·고도화 시 DPG원칙 확산 및 일관성 확보
 -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 상향입법 추진
 - 유관 정부위원회, 부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연계성 강화
 - 위원장*단 정례 협의체 구성 및 위원회-부처 실무협의체 운영
- * 국가데이터정책위, 공공데이터전략위, 정보통신전략위 등 유관 위원회

□ 예산 편성·집행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사업방향 제시('23년~)
 - '24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반영
 -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에 근거가 되는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기본원칙 반영 여부 확인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조정을 거쳐 기재부 제출** 등 예산 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 추진

* 각 부처·지자체 실행계획에 DPG 원칙·비전 등과의 연계성 상세 적시 의무화

** DPG 정책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에 의견 제출

□ 평가 및 환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평가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칙·정책 반영('23년~)
 - (중앙부처) 전 부처에 적용 가능하도록 정부혁신 평가 세부지표*에 반영
 - * 민간 SaaS 도입,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등
 - (지자체 합동평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참여도 평가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지표* 평가 시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 노력 반영('24년)
 -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등
- 단위별 우수 기관,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 사례집 작성·배포 등 정책환류 강화
 - 평가 미흡기관 및 신청기관 대상 디지털플랫폼정부 컨설팅 지원
-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건의센터 설치 등 상시 소통체계 운영

□ 공직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역량 강화

- 중앙·지자체 교육 기관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전문기술 교육* 중심으로 직위, 직렬(고위직, 행정직, 기술직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 디지털 전환 정책, 초거대 AI 기술 적용, Low-code/No-code 프로그래밍 등
- 고위공무원단·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해도 과제를 통한 디지털 정책 역량 제고
- 정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사례 공유·확산

◇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부처 내] 부내 데이터·정보화 부서 위상 제고

-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부처 내에서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한 부처 내 CDO·CIO 기능과 역할(예산 검토, 사업 조정) 실질화

* 「공공데이터법」, 「지능정보화기본법」상 부처 기조실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통상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역할 수행

- 부처 내부 디지털·데이터 기능의 통합 등 서비스·데이터의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부내 조직개편 검토

* (예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교육 대전환 추진

○ [부처 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력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정보화사업 등 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
- 정부 업무 전반의 디지털 기반 재설계, 부처별 시스템 연계·통합 등 기존 정보화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지침개발 등 역할 수행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유관 법령들과 역할 정비, 추진체계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1. 하나의 정부		
1.1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 전반 혁신(Digital by Design)		
□ 행정제도·절차에 디지털 기본원칙 적용		
•디지털 기본, 보완적 아날로그 전환 근거 마련		행안부, 과기정통부 / 전 부처
□ 행정제도 전면 재설계		
•아날로그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		행안부 / 전 부처
•인감증명제도 디지털방식 대체 수단 제공		행안부, 법원행정처 국토부 등
•실물 신분증 모바일 발급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Digital by Design 지원사업 확대		행안부
□ 종이 없는 행정		
•원본 보관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과기정통부, 법무부 / 전 부처
•연구 현장 등 감사 시 증명자료 전자적 형태 제출		과기정통부, 감사원 / 전 부처
•전자고지를 기본으로 법령 개정		행안부, 과기정통부 / 전 부처
•전자고지 확대		행안부 / 전 부처
□ AI가 읽는 문서		
•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행안부 / 전 부처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문화 혁신		행안부 / 전 부처
□ 자동화 행정		
•자동화 도입		행안부, 과기정통부 / 인사처, 기재부 등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1.2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		
□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데이터 공유·개방 방식으로 전면 전환		
•정부기관 간 모든 데이터 공유·개방 의무화		행안부, 과기정통부
•데이터 공유·개방 저해법령 일괄 정비		전 부처
□ 네거티브 공유·개방의 지속 추진체계 마련		
•법령 제·개정시 ‘데이터 공유·활용 영향평가’ 의무화		행안부, 과기정통부
•전담기관에 법률·시스템 점검·시정 권고 권한 부여		행안부,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적극적 데이터 개방·공유 유도		행안부, 과기정통부 인사처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		
□ 인공지능·데이터·서비스 융합 플랫폼 마련		
•데이터·서비스 융합을 위한 통합플랫폼(DPG 허브) 구축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인프라 마련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인프라 마련		과기정통부
•공통기능 활용을 위한 범부처 공용서비스 빌딩블록 구축		행안부
•혁신서비스를 구매·사용하는 마켓플레이스 제공		과기정통부, 행안부
□ 누구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혁신서비스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과기정통부
•혁신서비스를 실제환경에서 검증(Field-Trial)·구현 지원		과기정통부, 행안부
□ 민간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		행안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DPG 구현을 위한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행안부, 과기정통부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2. 똑똑한 나의 정부		
2.1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통합서비스		
□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One Government, One Site}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통합창구로 연계·통합	행안부 / 국세청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법원행정처 국토부, 관세청 금융위, 식약처 등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합인증 체계 적용	행안부 /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에 효과적인 UI/UX 구현	행안부 /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 정보요구는 한 번만^{Once Only}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한 중복요구 제로화	행안부	
•공공서비스 신청에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행안부 / 개인정보위	
2.2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		
•인공지능 기반의 알림·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구축	행안부 /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식약처 개인정보위 등	
•디지털신분증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 구현	행안부/ 전 부처	
2.3.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 국민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 접근성·편리성 향상		
•웹·앱·기기 접근 편의 제고를 위한 공통서비스 기반 마련	행안부, 과기정통부	
•지능형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표준 보급·확산	과기정통부, 행안부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	
•재외국민·동포의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마련	외교부 /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 대면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의 행정·민원을 지원하는 디지털민원실 구축·확대		행안부
□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가까운 곳에서 디지털역량 교육을 받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과기정통부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 지원으로 디지털사각지대 해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 디지털 기술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취약계층의 불편해소를 위한 4대 분야*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 건강, 돌봄, 사회복지, 이동편의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등
2.4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상화		
□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국가적 문제의 사전진단·대응을 위한 온라인 국정상황실 구축		행안부 / 전 부처
•국가 현안 대응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행안부 / 전 부처
□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행안부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확대		행안부
•민간데이터 구매·활용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조달청 행안부 등
□ 전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행안부, 기재부 / 전 부처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 확대		행안부
•국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행안부
•공무원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행안부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2.5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 정책 형성·결정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권익위	
□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관심정보 공개 및 선제적 정보공개 기반 마련	행안부	
□ 더 자세한 정보공개		
•행정감시가 쉽도록 세부내역 공개	행안부, 기재부 등	
□ 알기 쉬운 정보공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체계 개선	행안부, 기재부 인사처 등	
2.6 디지털플랫폼 기반 지역 혁신		
□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행안부	
□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	행안부	
□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광역별)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행안부	
3.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3.1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플랫폼 구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민간참여 보상체계 및 패스트트랙 마련	과기정통부, 행안부	
3.2 민간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융합·활용 촉진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		
•핵심데이터를 발굴·신속개방하는 데이터 발굴단 운영	행안부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데이터 수요·활용지수체계 운영		행안부
•원천데이터 개방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행안부
•민·관 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 명세 개방		과기정통부, 행안부 / 전 부처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		행안부
□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미개방데이터 제공 확대		
•지역 거점 데이터안심구역 확대		과기정통부 / 전 부처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		과기정통부 / 전 부처
•온라인안심구역 제공		과기정통부 / 전 부처
□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새로운 민간 융합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개방 확대		행안부
•국내 관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민·관 융합서비스 지원		문체부
3.3 디지털 트윈을 통한 AI·데이터 산업 퀀텀 점프		
□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AI·데이터산업 퀀텀 점프 기반 마련		
•범부처 디지털 트윈 전략 수립		과기정통부
•민간기업의 융합서비스 개발 인센티브 제공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 인허가 사전 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시범모델)		국토부, 산업부
•원(One)사이트 포털 구축(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연계)		행안부
□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4대 중점분야(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디지털 트윈 코어 구축 및 시범·실증 추진		과기정통부 /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3.4 GovTech 기업 성장 지원 강화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략적 육성		
•SaaS 생태계 지원(동반성장평가 실적인정)		동반성장위
•SaaS 전환 컨설팅 지원		과기정통부
•SaaS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 교육부
•민관합동 SaaS개발 지원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 혁신서비스 신속 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절차 간소화·유연화 추진		
•공공분야 SaaS 퍼스트정책 실현		행안부 / 과기정통부, 기재부
•정보화사업(ISP) 절차 간소화 추진		기재부 / 과기정통부, 행안부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과기정통부 / 기재부
□ 창업·성장·혁신네트워크·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DPG 100+ 운영		과기정통부
•GovTech 기업 자금지원 강화		중기부
•클라우드 기반의 DPG 혁신 네트워크 구축		과기정통부, 산업부
•DPG 해외수출 추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3.5 공공분야에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		
□ [복지] 꼼꼼히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위기 발생 전, 위기가구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발		복지부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도입		복지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 돌봄 지원		복지부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 [재난/재해] 먼저 찾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사회문제 발굴·분석시스템 개발	행안부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안전 경비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 행안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119 신고접수 플랫폼' 구축	소방청
•범정부 재난관리 전 단계 통합·연계 체계 구축	행안부
•대국민 재난안전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	행안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밀집 위험 상황 예측·분석시스템 도입	행안부
•인공지능 융합 유해 화학물질 판독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 소방청
•인공지능 기반 산림해충 방제 지원	과기정통부, 산림청
□ [청년] 초개인화 맞춤형 청년서비스 확대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
•청년정책 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국무조정실
□ [행정] 정부 전용 초거대 AI Assistant 구현	
•정부 전용 초거대 AI(Gov AI)	행안부, 과기정통부
□ [민원]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민원 상담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민원도우미 구현	행안부 / 과기정통부 권익위
□ [기타] 의료, 소상공인, 교육, 내부행정, 조달 등	
•공공병원 대상 인공지능·디지털 의료 확산	과기정통부
•소상공인 대상 AI로봇, AI콜센터·챗봇, 키오스크 도입	과기정통부, 중기부
•인공지능 기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기정통부, 교육부
•지능형 국가기록물 서비스 제공	행안부
•AI·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조달 추천	조달청

추진과제		주관부처/관계부처
4.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4.1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국민의 권리 강화		
□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령 정비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및 선도서비스 추진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추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확대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실증사업 추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특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개인정보위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공부문 주요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위 / 전 부처
•개인정보 보호 평가체계 강화 및 유출 대응		개인정보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활성화		개인정보위
4.2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체계 구축		
□ 디지털플랫폼정부 환경에 적합한 보안 체계 마련		
•제로 트러스트 도입		과기정통부, 국정원 행안부
•공급망 보안 도입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 보안 신기술 개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보안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신기술 기반 보안산업 육성		과기정통부
□ 민·관 상시 보안 협력체계 구축 및 회복탄력성 강화		
•민·관 상시 보안 대응체계 마련·운영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정원 개인정보위

◇ 국민·기업(385건), 행정·공공기관(135건) 등 다방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과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 선별

1 2023년 선정 과제

순번	분야	주요내용
1	청년정책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알림] 부처·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알림 제공
2	복지위기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본인, 이웃, 신고의무자 등 신고 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위기가구 발굴
3	재난안전	[대국민 재난안전 맞춤서비스] 분산된 재난안전 서비스를 예방~복구 단계 까지 국민 필요정보를 맞춤형으로 한 곳에서 제공
4	신고접수	[지능형 119 신고접수] 신고 전화 급증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119 접수 및 긴급도 분류 지원,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재난신고 접수 및 대응
5	밀집위험	[AI·디지털 기반 밀집위험 예측·분석]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밀집위험 상황 예측·분석
6	마음건강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국민 마음건강 데이터를 민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진단, 분석, 예측하고 마음건강 위기에 선제적·맞춤형 대응
7	민원상담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민원도우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상담
8	취약계층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바우처 수급자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9	비대면 본인확인	[해외체류 국민·동포 비대면 본인확인] 재외국민·동포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권, 해외 체류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본인확인
10	조달입찰	[AI-데이터 기반 간편 조달추천] 조달 데이터 분석, RFP 의미추출, 주요 기업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한 맞춤형 공고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및 컨설팅 등
11	디지털 재설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위임장] 서면 위임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비대면 이용환경 제공

② 2022년 선정 과제

순번	분야	주요내용
1	실손보험	[실손보험 간편청구]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온라인 전송하여 실손보험을 편리하게 청구·지급
2	주택청약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흩어져 있는 청약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은 원스톱 조회·신청이 가능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청약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마이데이터로 부동산거래 사각해소] 부동산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에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 대국민 편의 제공
4	디지털지갑	[디지털지갑 통해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 등 활용] 신분증·증명서 등을 한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디지털플랫폼 제공
5	청년일자리	[일자리매칭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채널을 통합해 맞춤형·개인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한 행정 처리 지원
6	골목상권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하여 시·군·구·읍·면·동·리·동별 실시간 상권정보, 맞춤형 컨설팅 제공
7	무역금융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통해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 간소화
8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 제공]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곳에 집적해 민간플랫폼과 연결하고, 원스톱 신청, 맞춤형 추천 등 구현
9	복지사각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사각 해소]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안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급여·서비스 지원
10	국정공유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 국정상황문제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 국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 제공

외부유출 금지

순번	분야	주요내용
11	위험경보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부처별 주요 수입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위기 시 범부처 공동 대응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강화
12	진료기록	[온라인 진료기록 조회·발급] 국가의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조회·발급
13	육아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확인] 지능정보기술로 식중독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어린이 급식 영양의 질 제고
14	주거정책	[주거복지정보 통합제공, 주거취약계층 지원] 전국 공공주택 및 주거 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15	디지털포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시·군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한 장애인 콜택시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16	군복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여러 기관·부서에 분산된 병무·복지·의료 등의 장병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구현
17	UI/UX	[공공웹·앱 UI/UX 개선] 국민 누구나 공공웹·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여 공공웹·앱 사용자 경험 향상
18	로그인	[민간 ID로 공공웹·앱 로그인] 국민이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하게 공공웹·앱에 로그인 할 수 있는 'Any ID 간편 로그인' 구축
19	입체주소	[스마트주소 구축 및 서비스모델 보급] 주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공유하고 서비스모델을 보급해 주소로 안전·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 구현
20	정책제안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국민제안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제안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원·제안 분석·활용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